

# BOK Reports

2025. 8. 28.

---

2025년 8월 28일 금통위 회의를 위해 작성한  
주요 이슈 관련 참고자료들입니다.

---





---

## 차 례

---

### I. 금융·경제 주요 이슈

1.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1
2.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6
3.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4. 최근 기업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점검	33

---

### II. 주요 통계 및 참고자료

1. 실물경제	40
미국, 유로, 한국 등 주요국 경제전망 비교 표	
원유·천연가스 선물가격 동향	
무역수지, 경상수지 규모 및 GDP대비 비중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주요국 비교	
2. 금융시장	44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및 변동폭 비교	
한·미 금리차 현황	
우리나라 및 미국 장단기금리차	
한·미 금리역전기 사례	
주요국 수익률 곡선	
주요국 회사채 및 CP 신용스프레드 비교	
주식시장 PER	
중동 무력 분쟁 이후 국제금융시장 지표	
3. 외환시장	52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	
CDS프리미엄 및 KP스프레드 추이	
4. 금융안정 상황	54
기준금리 수준별 경제주체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부동산가격 동향	
은행 예대금리차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주택가격 변동	



---

## I. 금융·경제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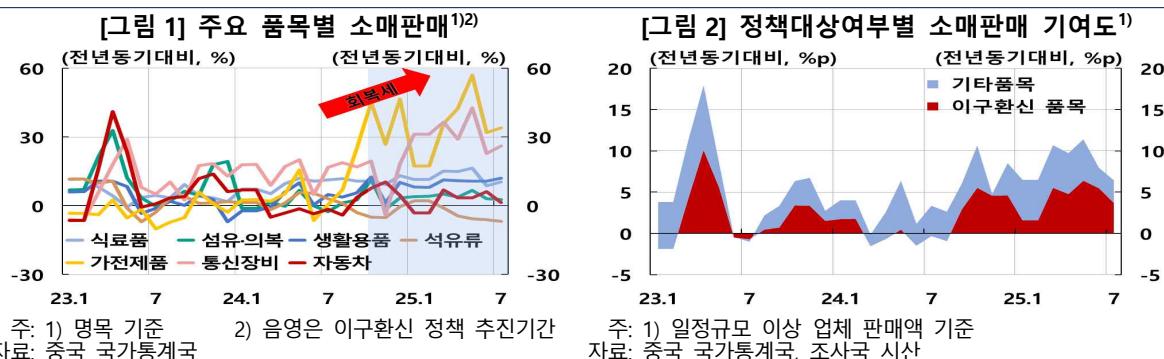
## I-1.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조사국 중국경제팀)

### 논의 배경

1. 중국경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외부문 리스크가 확대되고 그간 과도한 부동산 공급 등으로 투자의 성장견인 여력이 축소되면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중국소비를 대표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sup>1)이구환신</sup> 등에 힘입어 회복세<sup>24.4/4 3.8% → 25.1/4 4.6% → 2/4 5.4%(전년동기대비)</sup>가 확대되다가, 7월 들어 정책집행 지연 등으로 주춤<sup>7월 3.7%</sup>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 이구환신 정책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 움직임



### 소비여건 점검

2. 중국의 소비여건을 보면 ①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②부동산 부진 장기화, ③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 부정적 요인과 ④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⑤서비스소비 확대 정책 추진 등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①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가계소득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과 제조업 고용 정체는 향후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계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년간 청년실업률<sup>25.7월 17.8%</sup>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도 정체되는 등 노동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 중국정부는 소비를 진작하고자 24.9월 이후 이구환신 대상 품목 기전 등 내구재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구환신 정책은 대상기간 중 소매판매 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1%p 중반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이구환신 정책효과 추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 ② 부동산 부진 장기화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말 이후 반등하였던 1선도시 신규주택가격도 5월 들어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회복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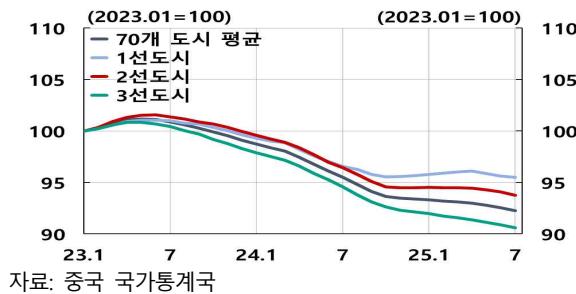
한편 주식시장이 회복되었으나, 중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은 주택 등 비금융자산<sup>2)</sup>으로 가계의 금융자산<sup>3)</sup> 보유 비중이 낮은 데다 주택가격의 부의 효과가 훨씬 큰 점<sup>4)</sup>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가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주식시장은 회복되었으나, 부동산 부문 부진이 장기화

[그림 6] 중국 기준주택가격·주가지수



[그림 7] 신규주택가격



## ③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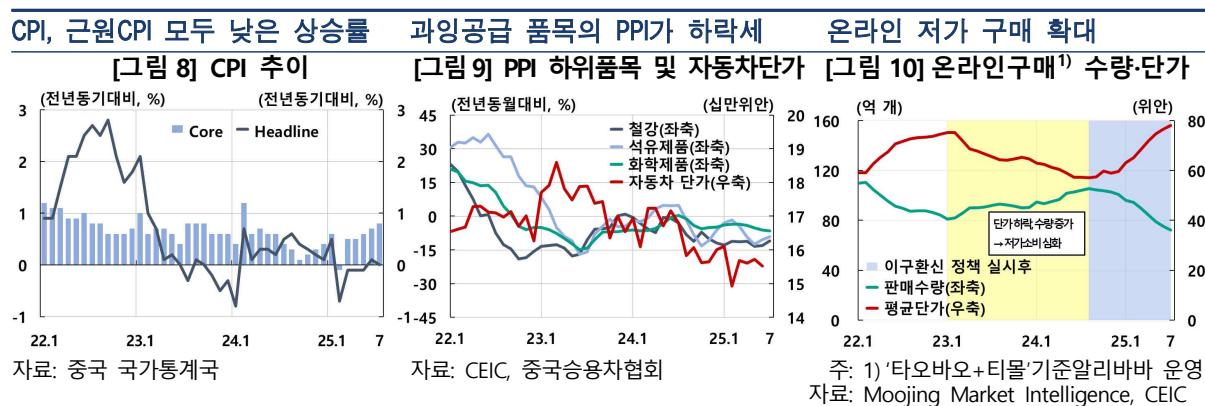
중국 근원CPI가 금년 상반기중 0.5% 상승에 그치고, CPI도 같은 기간 0% 내외의 등락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sup>4)</sup>.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정부의 보조금, 기업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과잉공급<sup>5)</sup>이 이어지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이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Bruegel(2025), AMRO(2025)</sup>.

2) 중국가계금융조사 기준<sup>2017년</sup> 가계의 자산은 주택 73.6%, 금융자산 11.3%, 사업 및 기타자산 15.1%로 구성되어 있다.

3) 중국의 경우 주식가격의 부의 효과는 주택가격의 1/10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결과가 있다<sup>Chen et al., 2020</sup>.

4) 중국정부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sup>7,2일</sup>는 경제 운영의 일부 문제<sup>과잉경쟁</sup>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이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저해<sup>디플레이션</sup>”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IB 및 외신에서도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로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sup>JPM, 7.11일</sup>, “과잉경쟁<sup>内卷, involution</sup> 문제로 기발표된 경제성장을 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쁠 가능성”<sup>CNBC, 7.11일</sup> 등을 지적하였다.

5) 저조한 취업기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저가 소비 품종가 지속<sup>최저가·기본형 제품 선호↑</sup>되었던 점도 기업의 저가공급을 유발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McKinsey, 2024)</sup>



#### ④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그러나, 중국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은 중국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다. 작년과 달리 금년 전국인민대표대회<sup>6)</sup>에서 중국정부는 소비 등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sup>6)</sup>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발표하였다<sup>7)</sup>. 금년중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sup>재정적자비율(GDP대비): 24년 3% → 25년 4%</sup>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구환신 정책 등의 재원인 초장기 특별국채<sup>8)</sup> 발행규모를 더욱 확대<sup>24년 1.0조위안 → 25년 1.3조위안</sup>하였다.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통제력<sup>9)</sup>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 확대<sup>10)</sup> 소비진작 특별 행동계획(3.16일)' 핵심과제 중 일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가계의 소비여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주요국에 비해 의료·실업보장 등 공적이전 지출이 미흡하고, 1인당 연금 수령액도 낮은 수준<sup>10)</sup>이다. 이로 인해 가계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려 하며, 중국의 가계순저축률<sup>2021년 35.7%</sup>은 주요국 美 4.5%, 韓 8.0%(2024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의료 및 연금 보장 강화 등 정부정책은 기초 소비여력 확보를 통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 2024년 전인대에서는 '산업고도화 및 과학기술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으나, 2025년 전인대에서는 소득보강 정책 개선, 이구환신 등을 통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7) 중국정부는 소비 확대 및 소비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급휴가 이행 확대, 음식숙박업뿐 아니라 문화 부문 등 서비스 소비 관련 정책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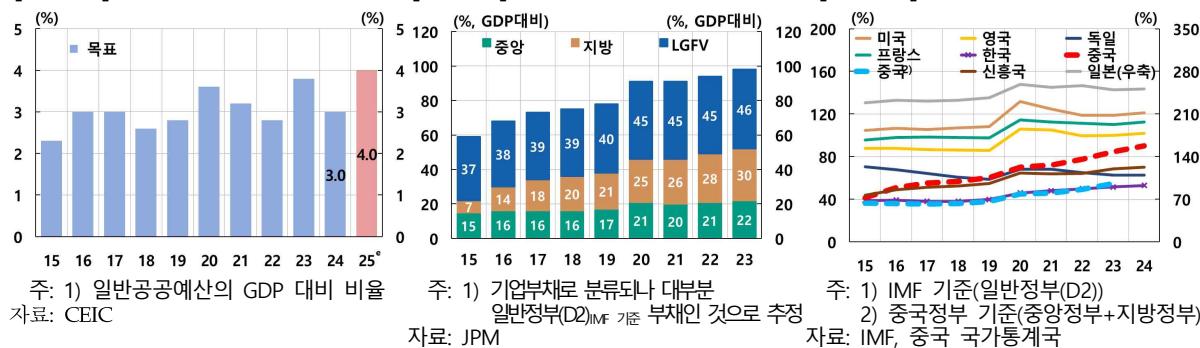
8) 기금예산에 포함되어 중앙정부 부채로 분류되나, 중국정부의 공식 재정건전성 지표<sup>(재정적자비율 등)</su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예산은 일반공공예산, 기금예산, 국유자본운용예산, 사회보장기금예산으로 구성되며, 공식 재정건정성 지표는 일반공공예산 기준이다.

9) 중국 정부부채 중 리스크가 높은 LGFV부채는 은행<sup>주로 국영은행</sup> 대출 비중<sup>22년 기준 약 60%</sup>이 가장 커 정부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10) GDP대비 정부의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비중은 각각 3.1%<sup>22년</sup>, 4.0%<sup>21년</sup>로 OECD 평균 7.0%, 5.0%보다 낮은 수준이며, 은퇴인구 50% 이상이 소득대체율 10%를 하회하는 연금<sup>월평균 223위안(약 4.3만원)</sup>을 수령한다<sup>Nomura, 3.21일</sup>.

##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그림 11] 중국 재정적자비율 목표<sup>1)</sup> [그림 12] 中 정부-LGFV<sup>1)</sup> 부채 비율 [그림 13] 주요국 정부부채<sup>1)</sup> 비율



주: 1) 일반공공예산의 GDP 대비 비율  
자료: CEIC

주: 1) 기업부채로 분류되나 대부분 일반정부(D2) IMF 기준 부채인 것으로 추정  
자료: JPM

주: 1) IMF 기준(일반정부(D2))  
2) 중국정부 기준(중앙정부+지방정부)  
자료: IMF,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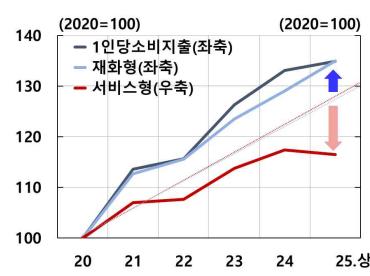
## ⑤ 서비스소비 확대 정책 추진

소비 형태별로는 서비스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휴식 확대 등 서비스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소비 활성화 정책(음식·숙박업, 문화 등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높은 수요 잠재력<sub>14억명</sub>이 있는데다 도시화 진전, 후커우<sub>호적 개혁</sub>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중국은 주요국 평균 GDP대비 60%에 비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sub>39.1%</sub>이 낮지만,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절대시장<sup>11)</sup>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후커우 제도 개혁으로 농민공의 도시 정착이 늘어난다면 이는 소비의 추세적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소비는 팬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하는 모습

[그림 14] 형태별 소비<sup>1)</sup>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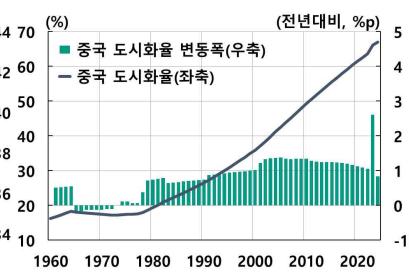
### 장기 민간소비 확대 전망

[그림 15] 장기 민간소비<sup>1)</sup>



###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모습

[그림 16] 중국 도시화율



11) Economist Intelligence Unit<sub>EU</sub>은 2030년까지 중국 민간소비 규모가 약 10조 달러<sub>24년 7.5조 달러</sub>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sub>BCG</sub>은 2030년까지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5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요약 및 향후 전망

3. 향후 중국 소비는 일부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된다.

4. 시장에서는 소비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이구환신 보조금 증액정책금리 인하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중국경제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이구환신 정책효과 추정

중국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가전·집수리자재·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휴대폰·태블릿·워치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sup>가전 8개→12개</sup>하였다. 이구환신 정책으로 정책대상 품목인 가전, 가구, 집수리자재, 자동차, 휴대폰 등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동 정책은 대상기간중 소매판매 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1%p 중반 높인 것으로 추정<sup>24.9~12월 +1.5%p, 25.상반기중 +1.4%p</sup>된다.

이구환신 대상 품목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2024	(1~8월)	(9~12월)	2025.상반기
<b>소매판매</b>	12.5	-0.2	7.2	3.5	3.4	3.7	4.0
(가전)	8.8	-2.4	-2.8	14.1	2.7	35.4	34.0
(가구)	5.5	-4.2	-1.7	3.8	-1.3	12.2	33.0
(건축장식)	11.5	-2.5	-13.9	2.0	-0.2	5.8	6.1
(자동차)	10.9	4.3	7.7	1.7	-1.0	6.4	2.6
(통신장비)	13.7	0.0	9.2	13.3	14.5	11.5	31.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CEIC

이구환신 정책효과 추정<sup>1)</sup>

(억위안, 배)

	2024.9~12월	2025년 상반기
보조금 총액(A) <sup>2)</sup>	1,667	1,800
소매판매 증가액(B) <sup>3)</sup>	2,477	3,201
(소매판매 증대효과 전년동기대비) [연간 명목GDP 증가 기여도]	(+1.5%p) [0.18%p]	(+1.4%p) [0.24%p]
배율(B/A)	1.49	1.78

주: 1) Citi(2025) 추정방식 등 활용

2) 중앙정부(90%) + 지방정부(10%)

3) 이구환신 정책 실시 직전인 24.1~8월중 품목별 평균증가율가전(2.7%)-자동차(-1.0%)-가구(-1.3%)-건축장식(-0.2%) 대비 추가 증가분.

단, 25.1월부터 정책대상에 포함된 통신장비는 24.1~12월 증가율(13.3%) 대비 추가 증가분.

자료: 중국 재정부, 국가통계국, CEIC, 조사국 시산

## I -2.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조사국 경기동향팀·물가동향팀·구조분석팀·지역연구지원팀·아태경제팀)

### 검토 배경

1. **극단적 기상현상**<sup>extreme weather events</sup>이 더욱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도 흥수·가뭄·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충격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일상적·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대형산불과 허리케인, 흥수, 기록적 폭염 등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sup>12)</sup>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현상의 경제적 충격과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여름철<sup>6~9월</sup>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 최근 우리나라 집중호우·폭염 현황

2. 우리나라의 집중호우와 폭염은 발생빈도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특히 2020년대 들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수량을 의미하는 집중호우<sup>13)</sup>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sup>39일</sup> 대비 23.9% 증가했으며,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격렬한 비<sup>violent rain</sup>가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폭염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을 기록한 폭염일수는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sup>46일</sup>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가중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올해의 경우 아직 하절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추이를 감안할 때, 2024년에 버금가는 수준의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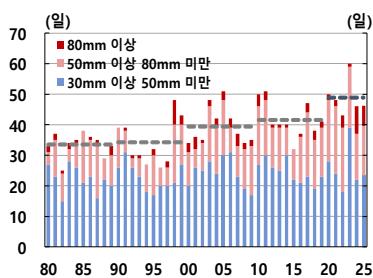
12) 미국의 경우 지난해 세 차례의 허리케인(Beryl, Helen, Milton)으로 24.3/4분기 및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0.3~-0.1%p, -0.4~-0.2%p 하락, 올해 초 대형산불(LA)로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0.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우리나라 기상청은 '3시간 누적강수량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강수량 110mm 이상' 시 호우주의보를, '3시간 누적강수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누적강수량 180mm 이상' 시 호우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있다. 참고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리적 특성에 따라 기상여건이 다양하므로 일률적 기준이 없지만, 시간당 50mm 이상의 호우를 열대 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격렬한 비(violent rain)"로 소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집중호우와 폭염 발생빈도는 상승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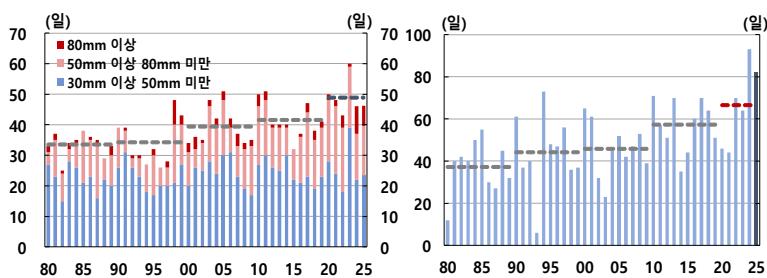
최근 3년간(23~25년)  
집중호우·폭염 모두 역대  
최고 수준

[그림 1] 전국 집중호우 빈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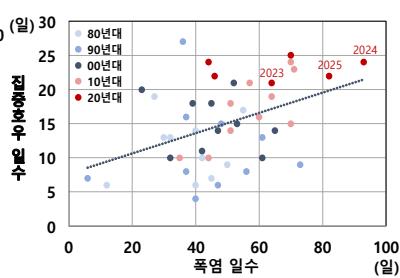
주: 1) 각 연도중 시간당 강수량이 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일수, 2025년 8월 이후는 추정치

[그림 2] 전국 폭염 빈도<sup>1)</sup>



주: 1) 각 연도중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을 기록한 일수, 2025년 8월 이후는 추정치  
자료: 기상청, 조사국

[그림 3] 전국 집중호우·폭염 빈도<sup>1)</sup>



주: 1) 집중호우는 시간당 50mm 이상 기준, 2025년 8월 이후는 추정치  
자료: 기상청, 조사국

### 집중호우·폭염의 성장에 대한 영향

3. 극단적 기상현상의 성장 영향은 그 원인과 부문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 하에서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각 부문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국소투영모형 Local Projection Model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sup>14)</sup>

4.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설업 [그림 4-1]은 공사 중단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당폭 감소한다.<sup>15)</sup> 농림어업 [그림 4-2]도 농경지 침수·가축 폐사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sup>16)</sup>가 발생하는데, 분석 결과<sup>17)</sup> 집중호우 발생일수 열흘 증가시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p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대면서비스 [그림 4-3]는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대면서비스는 당기뿐만 아니라 일정시점 후 재차 감소하면서 누적 영향이 확대되는데, 이는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이 상승한 후 일정 시차를 두고 외식물가가 상승하며 음식업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우 실내작업이 대부분인 만큼,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매판매의 경우, 차량연료, 의복 등 야외활동 관련 품목에서 판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소매 등 기후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부문이 늘어나면서 집중호우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4) 국소투영모형은 Costa et al.(2025)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 통계청의 월별 소매판매액지수(전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건설기성, 제조업 생산지수 및 한국전력공사의 월별 전력판매량 등을 포함하였다. 기상 변수로 기상청의 월별 폭염일수 및 집중호우일수를, 통제변수로 정책금리, 전산업생산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사용했으며, 계절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월 더미변수도 포함하였다. 시차변수는 포함유무에 따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생략하였다. 집중호우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 30mm 이상,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C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1월부터 2025.6월이다.

15) 다만, 이후 피해시설 복구 등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만회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 지난 7월 집중호우 사례를 보면, 농업 부문 피해가 전체 경지면적의 0.5% 수준으로 추정되며, 개별 작물로는 피해 지역에 생산이 집중된 벼, 땅기, 멜론, 수박 등에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17) 부문 특성상 월별 고빈도 지표가 부재하며, 분기GDP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 연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농림어업GDP 성장률을, 독립변수로 집중호우 발생일수를, 통제변수로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증가율 등을 활용하여 1984-2023년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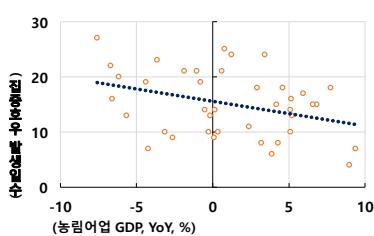
##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

[그림 4] 집중호우의 부문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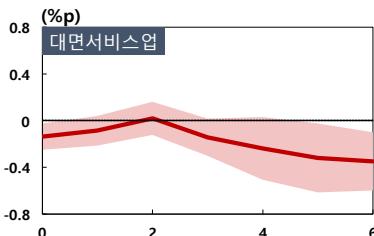
[그림 4-1] 건설업<sup>1,2)</sup>



[그림 4-2] 농림어업



[그림 4-3] 대면서비스<sup>1,3)</sup>



주: 1) 집중호우 충격의 t개월 누적 영향, 음영은 90% 신뢰수준

3) 제조업, 소매판매는 그 결과가 유의하지 않아 생략

자료: 조사국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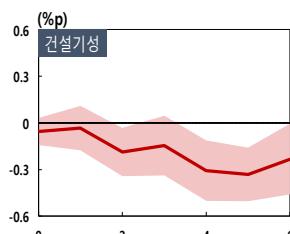
2) 건설기성 기준

**5.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설업 [그림 5-1]은 당기 영향은 크지 않으나, 폭염으로 인한 작업 속도 저하가 누적되면서 4~6개월 이후 시계에서 뚜렷한マイ너스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림어업은 폭염으로 인한 생산 감소 영향이 전체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sup>18)</sup>이나, 여름무 등 계절 과채류 생산 감소, 축산물 및 양식어류 폐사, 산란계·젖소 생산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에 관한 다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면서비스 [그림 5-2]는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집중호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영향이 가시화되며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의 경우 단기적 상방 효과도 일부 존재한다. 소매판매 [그림 5-3]의 경우, 냉방가전 판매가 증가하며 내구재 중심으로 당기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업 [그림 5-4]은 가계의 전력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다. 그러나,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 여타 소비가 구축될 우려,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기업 생산 증가로 인한 성장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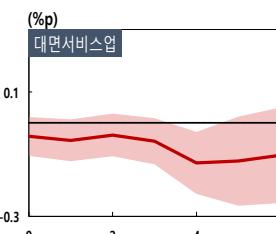
## 폭염은 건설업과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전기업 등 단기적 상방 효과도 일부 존재

[그림 5] 폭염의 부문별 영향<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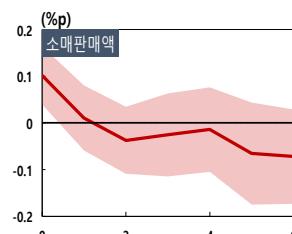
[그림 5-1] 건설업<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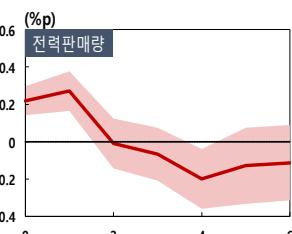
[그림 5-2] 대면서비스



[그림 5-3] 소매판매



[그림 5-4] 전력판매



주: 1) 폭염 충격의 t개월 누적 영향, 음영은 90% 신뢰수준  
2) 건설기성 기준

자료: 조사국 추정

18)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폭염 피해가 극심했던 2018년에도 폭염 피해 규모(농작물 기준 793㏊)가 호우(9,7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1984-2023년 중 농림어업 연간 성장률과 폭염발생 빈도수 간 상관 계수도 0에 가깝다.

7. 상기 분석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4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sub>20~25년</sub>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p<sub>연간 0.04%p</sub>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다만, 실제 기상여건의 변화와 경제주체들의 대응 양상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안전관리 강화<sup>20)</sup>로 폭염시 조업시간 단축이 과거보다 더욱 두드러질 경우에는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정부의 가전제품 구매 지원정책으로 계절가전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한 성장을 하락이 일부 상쇄될 수 있겠다.

### 집중호우·폭염의 물가에 대한 영향

10.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2007~8년 세계 식량 위기와 곡물가격 급등 이후 인플레이션 요인<sub>climateflation</sub>으로 주목받아 왔다.<sup>21)22)</sup>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폭우, 폭염, 해수면 온도 상승 등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농축수산물 피해가 잦아지고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후변화의 국내물가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sup>23)</sup>.

11. 금년 여름에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주요 농축수산물이 피해를 입고 가격이 급등하였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몇 차례 반복된 결과 주요 농산물 침수 피해는 물론 생육품질 저하가 나타났고, 가축과 양식 수산물도 다수 폐사하였다. 폭우가 전남·경남지역 등에 집중되어 지역 내 주요 작물<sub>수박, 멜론, 엽채류 등</sub> 피해가 컸으나, 강원도 등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sub>오이, 호박 등</sub>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최근에는 강원지역도 가뭄이 심화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 품목별 가격 변동을 보면, 농산물가격은 7월중 기상여건 악화로 출하가 감소한 시금치·깻잎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실 가격이 큰 폭 상승하였다.<sup>[그림 6]</sup> 그 결과 7월 소비자물가 내 품목별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 분포는 폭우·폭염 피해가 컷던 해<sub>23년</sub> 등 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sup>[그림 7]</sup>. 다만, 8월 들어 기상 상황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일부 농산물<sub>수박, 토마토 등</sub>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sup>[그림 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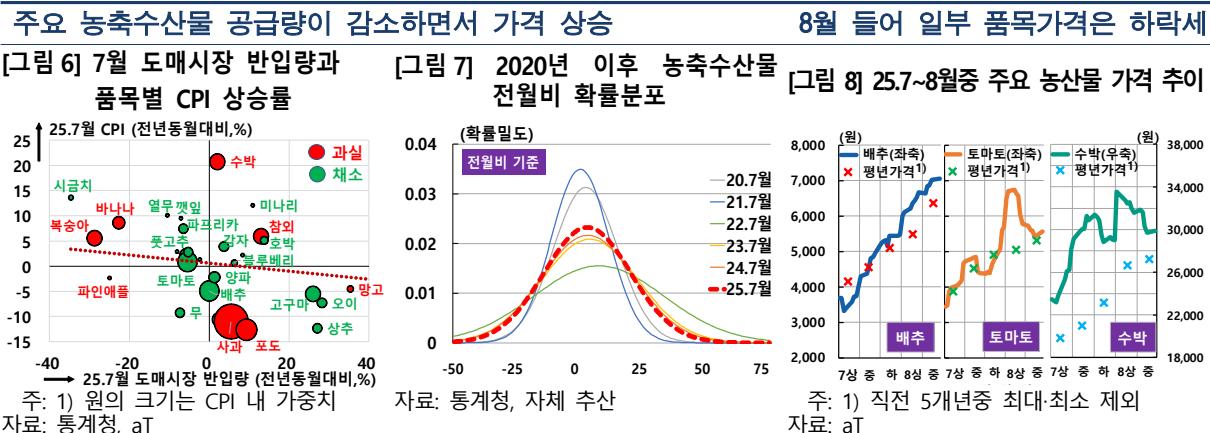
19) 국소투영모형에서 도출된 각 지표의 누적효과와, 해당 지표와 부문별 GDP 간 탄성치를 이용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금년 8~9월 집중호우와 폭염일수는 추정치(8월은 1~21일중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 9월은 최근 5년 평균치 이용)를 사용하였다.

20) 2025.7.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이 의무화되었다.

21)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시경제적 연구는 2007~08년 세계 식량 위기, 2010년 러시아 가뭄, 2012년 미국 중서부 가뭄, 2022년 이후 연이은 가뭄·홍수·폭염과 이에 따른 주요 식량가격 급등을 경험하며 발전해 왔으며, 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도 기후위기를 물가 및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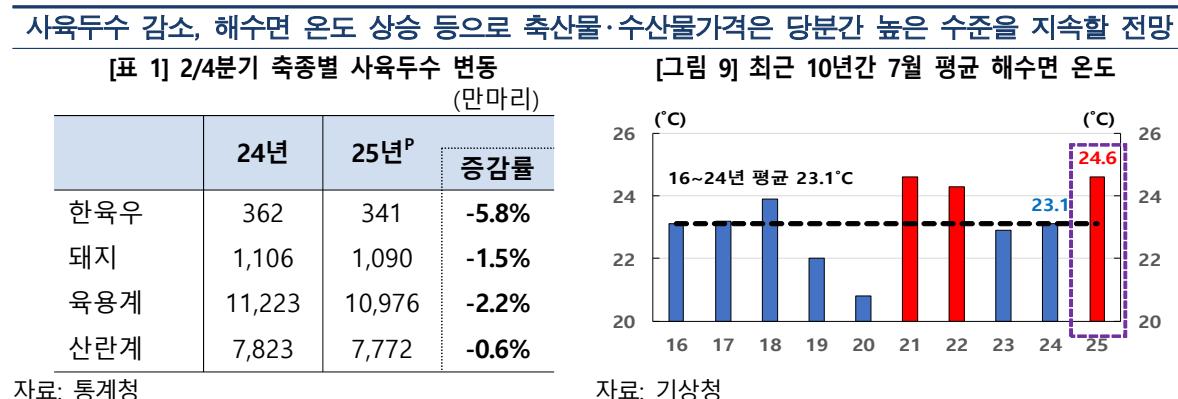
22) 선행연구는 주로 기후변화를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인식하여 물가상승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나(Kotz et al., 2024 등), 수요 위축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가 우세하다는 연구결과(Guerrieri et al., 2022 등)도 다수 존재한다.

23) 조병수 외(2024)는 평균기온이 일시적으로 1°C 상승할 경우 국내 농축수산물가격이 최대 0.3%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도 0.07%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김지현 외(2025)의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 충격이 국내 GDP와 인플레이션을 모두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축산물의 경우 집중호우·폭염으로 주로 가금류<sup>24)</sup>, 오리 등 피해<sup>24)</sup>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계란가격도 폭염에 따른 산란계 폐사 및 산란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평년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 감소<sup>[표 1]</sup>, 법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sup>25)</sup> 8.31일 시행 등도 기상여건 악화와 함께 축산물가격 상승에 기여하였다.**

**14. 수산물가격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조업, 양식출하 감소로 높은 오름세<sub>7월 7.3%</sub>를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장기평균을 1°C 이상 상회하는 현상이 잦아진 데다<sup>[그림 9]</sup>,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여 주요 어종의 조업량 감소, 양식 수산물 폐사 등 피해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고등어, 오징어 등 소비 비중이 높은 어류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산물가격의 소비자물가 기여도가 23.2월 이후 최고치<sub>7월 0.08%</sub>로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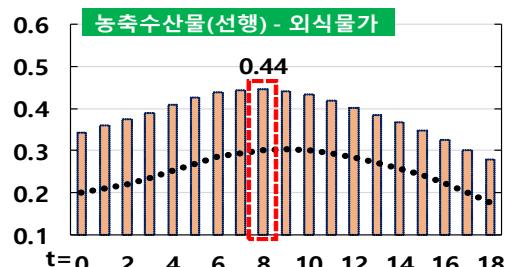
24) 가금류로는 닭 143만마리(전체 사육규모의 0.8%), 오리 13.9만마리(1.9%)의 피해가 발생했다.

25) 축산법 개정으로 산란계 사육면적 규제 강화(마리당 0.05m<sup>2</sup> → 0.075m<sup>2</sup>) 시행(8.31일)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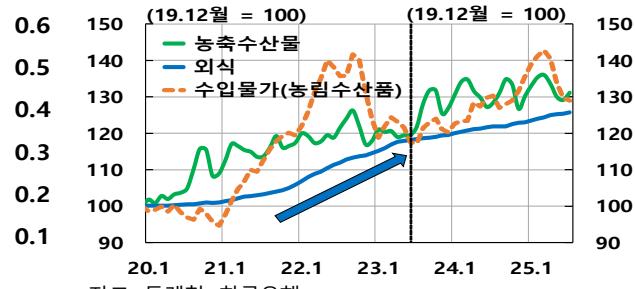
15. 농축수산물가격은 시차를 두고 외식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파급된다 [그림 10] 이용선 외(2013)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결과 ARDL 모형, 농축수산물가격 10% 상승은 3분기 후 외식가격을 0.9%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소비 부진 등으로 상당기간 축적되어 온 원재료 가격 상승압력이 외식가격에 충분히 전가되지 못한 상황으로 [그림 11], 향후 내수회복 과정에서 외식서비스물가 상승세가 높아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들어 찾아진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및 그 파급효과에 유의할 필요

[그림 10] 농축수산물·외식물가 간 시차상관계수<sup>1)</sup> [그림 11] 농축수산물·외식·수입농산물 물가 누적상승률



주: 1) 검은색 점선은 농산물과 외식물가간 상관계수  
자료: 자체 추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16. 7월 집중호우·폭염 이후 농축수산물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에 대한 모형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4분기중 0.3%p, 연간으로는 0.1%p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로 가을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sup>26)</sup>,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가격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 여름의 집중호우와 폭염은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업 등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농축수산물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충격의 크기가 기존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부정적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커지면서 기존 예측을 크게 상회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6) 기상청 태풍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4년)중 국내 영향권 태풍은 6~8월 25개, 9~10월 11개로 직전 10년 (2005~14년) 각각 20, 6개에 비해 더 많은 가을태풍이 발생하고 있다.

18. 또한 극단적 기상현상은 인명·재산 손실, 생산시설 피해, 생산성 저하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하방압력<sup>27)</sup>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긴요하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과거 기후 여건을 토대로 설계되어 있어, 기상급변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프라와 재난 대응체계 구축시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sup>28)</sup>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방재로 예방할 수 있는 피해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재정부담을 얼마나 감내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sup>29)</sup>

---

27) Costa et al.(2025)에 따르면 집중호우·폭염·한파·가뭄 등 극단적 기상에 따른 재해가 OECD 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0.3%p 이상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정원석 외(2024)는 과거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2001년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지속적이며, 인플레이션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한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더 길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28) <참고 1>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집중호우 대응력 평가」 참조

29) 고령화, 지방소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일본 등 해외의 대응 사례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2> 「일본의 방재인프라 개선 과제와 대응방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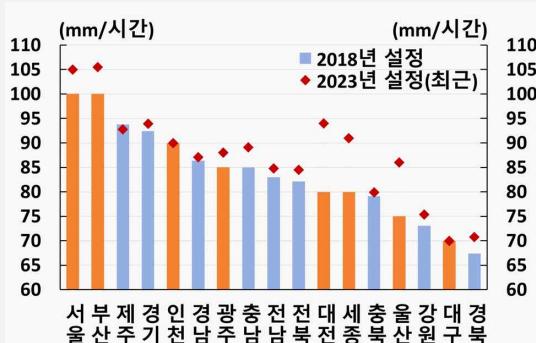
## <참고 1>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집중호우 대응력 resilience 평가

본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홍수와 호우로부터 재해<sup>30)</sup>를 예방하는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방재성능목표<sup>31)</sup>에 기후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64개 지역의 방재성능목표치를 자체 조사하였으며, 이를 2014~25년 중 전국 674개 관측소의 4~10월 시간별 강수량(이하 시강우량)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2년전 방재성능목표가 강화되었으나, 최근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목표치 초과 빈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12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전 기준치에 적용되던 30년 확률 강우량<sup>32)</sup>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초한 할증률을 적용한 새로운 방재성능목표 기준치를 제시하여 지자체가 방재성능목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1] 그러나 방재성능목표가 강화된 2023년 이후 목표치 초과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 일별 시강우량 최대치가 목표치를 넘어선 횟수의 추이를 보면, 예전 방재성능목표<sup>2018년 설정</sup>을 기준으로 2018~22년 중 8회 내외에서 변동하다가 2023년 2회로 잠시 안정화된 후 2024년 16회로 급증하였다. 강화된 방재성능목표<sup>2023년 설정</sup>을 적용하면 2024년 중 목표치 초과 횟수가 14회로 2회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이전<sup>2018~22년 중 연평균 8.6회</sup>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금년에도 8월 중순까지 이미 13회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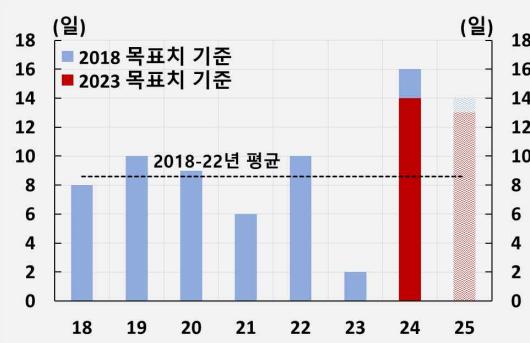
2023년 대도시 중심으로 방재성능목표 강화

[그림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sup>1)</sup> 변화



목표치 강화에도 목표초과 집중호우 건수 증가

[그림 2] 방재성능목표<sup>2)</sup> 초과 빈도



주: 1) 해당 시도의 지자체별 1시간 누적 강우량 목표치 평균. 2018년은 행안부 기준치, 2023년은 각 지자체의 실제 목표치 기준. 주황색은 특별·광역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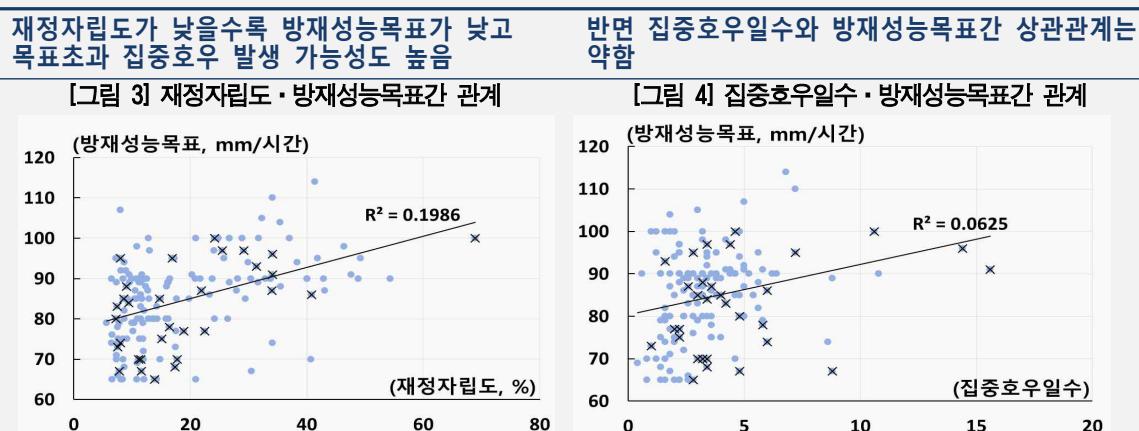
2) 1시간 누적 강우량 목표치 기준

자료: 기상청,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대상 자체 조사, 저자 계산

실제 사회기반시설의 집중호우에 대한 적응력은 이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치가 관련 규정→설계→시행에 적용되는 데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 제약 등의 지역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방재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설정된 방재성능목표에 미달하는 대응력을 보일 수 있다.

30) 우리나라의 호우로 인한 피해액(건물·선박·농경지·농작물·공공시설·사유시설)은 2023년 연간 7,745억원으로 전체 자연재난 피해액 중 80.8%를 차지한다.(2023 재해연보)

이처럼 집중호우 대응력이 부족하게 나타난 배경에는 방재성능 제고와 그에 따른 비용·효익 간의 상충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3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조정폭을 살펴보면, 침수피해가 클 수 있는 대전, 세종, 울산,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정폭이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방재성능목표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그림 3] 이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초과 집중호우 [그림 3 X표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중호우 빈도와 방재성능목표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다. [그림 4] 이는 방재에 따른 실질적 이득과 재정부담의 차이가 지자체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방재성능목표치가 지역 강우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 재정자립도는 2023년 결산 기준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집중호우일수는 2020-24년중 164개 지역의 시강우량 30mm 초과 일수 총합(연평균). X 표식은 2020-24년중 목표초과 집중호우 발생 지역을 나타냄  
자료: 기상청,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대상 자체 조사, 저자 계산

방재성능목표와 실제 방재성능 간의 시차, 최근 예상보다 급증한 기상이변 등을 감안할 때, 방재성능목표치는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보다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sup>33)</sup>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방재로 예방할 수 있는 피해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기후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재정부담을 얼마나 감내해낼 수 있느냐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적정한 투자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비용·효익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재난 예방뿐 아니라 재난발생후의 피해 최소화 정책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 취약계층 지원 강화, 관련 보험상품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31) 지자체는 처리 가능한 1시간, 2시간, 3시간 누적 강우량 등 총 3개의 방재성능목표치를 설정한다.

32) 특정지역에 3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우량을 의미한다.

33) 예컨대, 감사원(2024)의 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가장 낙관적인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에서도 2100년 기준 확률 강우량은 시간당 105mm로 현 방재성능목표(90mm)보다 16.7% 높아지고, 이에 따라 침수 면적과 피해액이 각각 43.3%, 55.4% 증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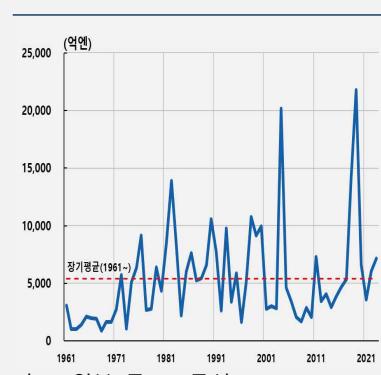
## <참고 2> 일본의 방재인프라 개선 과제와 대응방향

일본은 지형이나 지질 특성상 재해 리스크가 높다. 전세계 규모 6.0 이상의 지진 중 20%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천 유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수재해 피해가 많은 편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수재해 피해 규모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동일본 태풍 등으로 수해피해액이 역대 최대치인 2조 2천억엔에 이르렀으며, 2018년에도 서일본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1조 4천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림 1]

이와 같이 폭우·홍수 등 재해 리스크가 커졌지만 지방의 인구감소·고령화로 재해 대응능력은 약화되었다. 또한 과거 고도성장기에 건설된 도로, 교량, 항만시설 등이 노후화 [그림 2]가 진행되어 인프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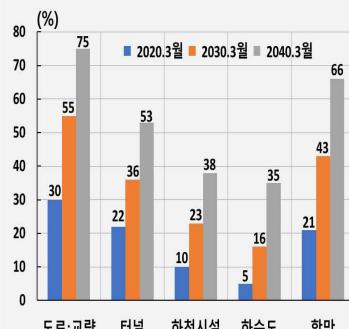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5년 주기로 “방재, 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인프라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예방보전형 유지보수<sup>34)</sup>, 신기술(AI, 드론 등) 활용 등을 통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인프라의 폐지, 기능전환 등을 통해 인프라 스톡의 적정규모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자체, 건설업체, 운송업체 등이 연계된 대응체제 구축, 전문담당자의 육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이주 지원, 위험지역의 신규 개발 억제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해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계획에서 사업규모는 이전 계획의 15조엔에서 20조엔 정도로 증액되었다.

[그림 1] 일본의 수해피해액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그림 2] 50년 경과 인프라 비율



[그림 3] 관리형태별 인프라 유지관리비



34) 사전에 성능저하를 점검하여 유지보수하는 방식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 비해 향후 30년간 32%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 I -3.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국)

### 검토 배경

1. 美 신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세계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다. 경제주체들이 관세정책의 향방이나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관세변화에 대응한 의사결정을 유보하면서 현재까지 관세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sub>한국·EU·일본 등</sub>과 미국간 관세협상 합의<sup>35)</sup>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관세율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향후에는 美관세의 영향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sub>성장·물가</sub>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주요 경로별로 추정하고,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을 짚어보았다.

### 美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2. 미국과 주요국간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감에 따라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이 명확해지고 있다.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과 함께 협상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그룹에 속한다. 4.2일 최초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기준으로 품목관세 등 모든 관세조치를 반영하여 시산한 평균관세율의 인하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수입 상위 50개국 중 한국은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 다만 美신정부 출범 이전에 적용되던 평균관세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관세율 인상폭이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 그룹에 속한다. EU,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0%<sub>EU와 일본은 각각 1.2%, 1.5%</sub>였던 데다 품목관세<sub>철강, 자동차</sub>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sup>36)</sup>

35) 7.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이외에도 총 3,500억달러 규모의 對미 투자펀드 조성에도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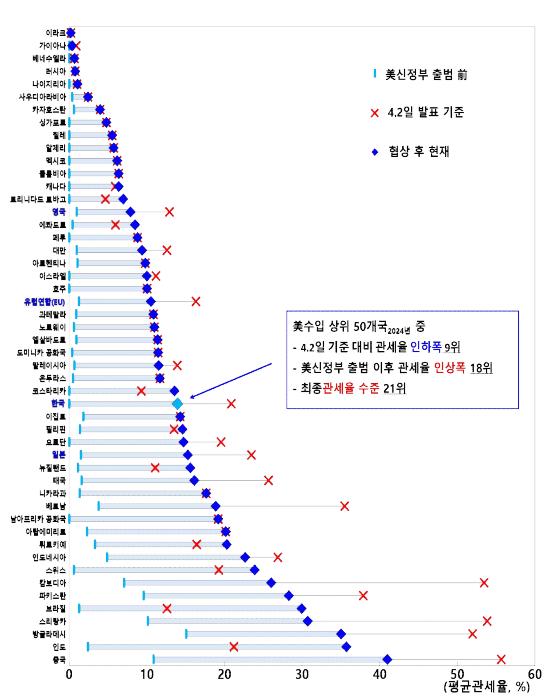
36)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개괄적인 평가는 참고4 美관세협상에 대한 주요 기관<sub>중앙은행·IB 등</sub>들의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이 명확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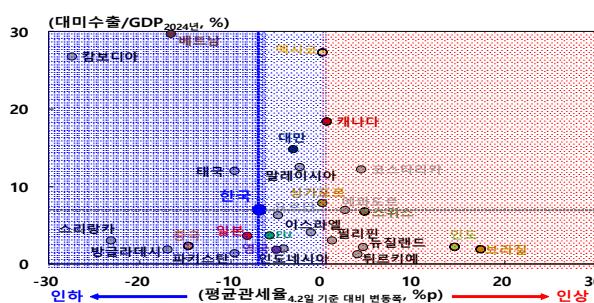
[표 1] 미국 관세정책 구조

구 분	관세율
국 가 별	상호관세
	국가별 10~41% (韓·日·EU 15%)
	펜타닐관세
품 목 별	中 20%, 캐 35%, 멕 25%
	인도 추가 25% 8.27일~, 브라질 추가 40%, 환적 40%
	철강·알루미늄·구리
	50% (英 철강·알루미늄 25%) 韓·日·EU 15%, 英 10%, 여타국 25%
반도체·의약품	0% (후후 부과 예상)
	에너지·희귀광물

[그림 2] 국가별 평균관세율 변화



[그림 1] 국가별 평균관세율 변화와 대미수출/GDP 비교



자료: 美백악관, 美연방정부 관보, 美Census, IMF WEO(2025.4), 한국은행 시산

## 美관세정책의 전달경로와 우리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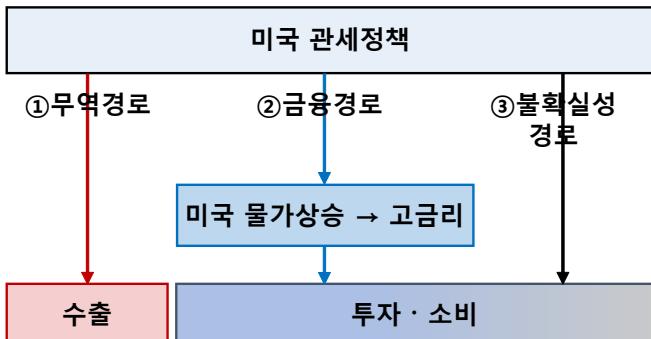
4.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게 3가지 - ①무역, ②금융, ③불확실성 -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①무역경로는 美관세로 미국외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역이 위축되는 경로이다. ②미국시장이 축소되면서 대미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고, 이를 별충하기 위해 ③여타국수출로 일부 대체하지만,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성장하방압력을 받아 ④여타국시장도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이 위축되고 성장도 둔화된다. ②금융경로는 美관세로 인한 미국의 물가압력 상승이 美정책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금융여건의 개선이 늦춰짐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받는 경로이다. ③불확실성경로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5. 성장의 경우 美관세의 3가지 경로 모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美관세의 영향 관세부과 없을 경우와 비교를 추정<sup>37)</sup>해 본 결과, 국내 GDP 성장을 조정폭은 금년과 내년 각각  $\Delta 0.45\%$ ,  $\Delta 0.60\%$ 로 내년에 영향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성장에서는 무역경로가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을 하향조정의 약 1/2을 설명하여 美관세 영향의 주된 경로로 분석되었고, 금융경로와 불확실성 경로가 약 1/4씩을 설명하여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37) 이는 기본적으로 모형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모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기업들의 조기선적, 재고활용 등을 통한 단기적 충격 완화 움직임과 협상상황을 고려한 가격전가 지연 등을 감안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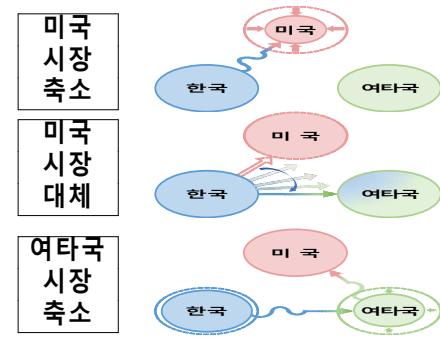
## 미국 관세정책은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

[그림 3] 美관세의 성장 영향 경로<sup>1)</sup>



주: 1)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출부문을 표시한 것으로, 이차적으로는 소득 및 생산을 통해 모든 지출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됨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美관세의 무역경로 영향



### <美관세의 국내경제 영향<sup>1)</sup>>

	2025 <sup>e)</sup>	2026 <sup>e)</sup>
GDP 성장률	-0.45	-0.60
• 무역경로	-0.23	-0.34
• 금융경로	-0.09	-0.10
• 불확실성경로	-0.13	-0.16
소비자물가 상승률	-0.15	-0.25

주: 1) 관세부과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한 변화율 차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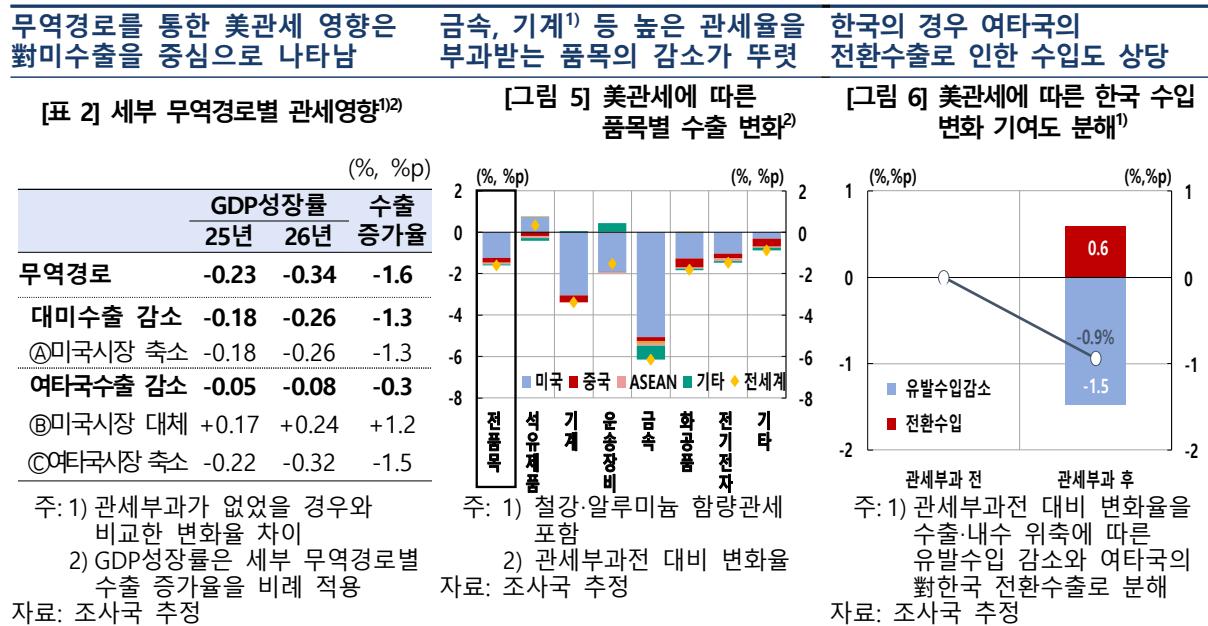
6. 물가의 경우 공급망 교란, 환율 상승 등이 공급측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측 하방압력이 더 강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美관세정책의 물가 영향은 금년중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5%p 낮추고, 美관세의 글로벌 수요 감소 효과가 확대되고 국제유가 하락세도 이어지며 내년에는 △0.25%p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7. 美관세가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①무역 경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3%p, △0.34%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업들의 단기적 재고조정·마진축소 등으로 자연되었던 관세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내년에는 품목관세·반도체·의약품도 추가 부과될 것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무역 경로는 관세부과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8)</sup> 물론 여타국으로 수출 대상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해당 국가들의 경제도 위축되기 때문에 **對여타국 수출은 전체로는 소폭 축소된다.**

8. 추가적으로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금속·자동차·기계 등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관세를 부과받은 금속과 금속이 많이 쓰이는 기계의 타격이 크며 자동차는 **對미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철강과 자동차부품 등에서 美관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등 여타국이 전환수출<sub>소위 밀어내기수출</sub>을

38) 세부 무역경로와 산업별 영향 분석은 Antras·Chor모형을 통해 추정한 美관세의 국내수출 변화를 이용하였다.

크게 확대할 경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클 수 있다.<sup>39)</sup>



**9. ②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triangle 0.09\%p$ ,  $\triangle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주요국의 보복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sup>40)</sup>하였으며, 이번 관세인상이 항구적 충격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과 금융여건 완화 지연으로 파급<sup>41)</sup>되면서 내년까지도 금융 경로를 통한 성장의 하방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였다.<sup>42)</sup> 또한 **③불확실성경로를 통해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triangle 0.13\%p$ ,  $\triangle 0.16\%p$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의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그간 크게 높아졌던 무역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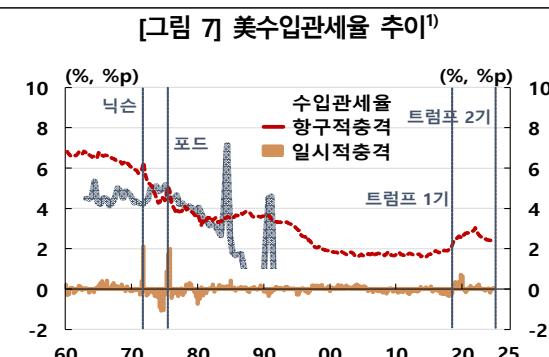
39) 중국의 수출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증가 규모 및 물가 영향에 대한 내용은 [참고2\] 중국의 수출시장 전환\(redirection\)](#)이 우리나라 대중 수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40) 2025.4월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발표('해방의 날')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후 진정되었다. Fed Notes(2025), Jurado et al.(2015) 등은 VIX지수 급등에 따른 충격이 기업투자 및 산업생산에 유의미한 감소를 초래함을 보였다.

41) 실제 올해 관세 영향으로 美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지고 글로벌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4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 美관세충격의 지속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차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조적 하락하던 美관세율은 미 신정부 들어 큰 폭 상승



주: 1) 수입관세율 = 관세수입액/상품수입\*100  
자료: BEA, Schmitt-Grohé and Uribe(2025)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최근 일부 완화



주: 1) 마지막 관측치는 25.7월  
자료: Baker et al.(2016)

## 세계경제와의 비교

10. 관세인상 당사국인 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고물가로 인한 성장둔화 압력 stagflationary에 직면한다. 여타국 경제는 통상여건 악화가 교역과 투자를 제약하며 성장과 물가 모두 둔화압력에 노출된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美관세에 따른 타격이 큰 편에 속한다. 아울러 미국과 공급망 연계가 밀접한 캐나다·멕시코, 우리와 마찬가지로 對美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의 성장 둔화폭도 크다.

GEM모형에 따른 美관세정책 영향 추정 결과

[표 3] 주요국 성장 및 물가 영향

(%p)	세계미국제외	미국	유로지역	중국	일본	아세안5	캐나다	멕시코	
성 장	2025	-0.3	-0.9	-0.2	-0.5	-0.2	-0.3	-0.6	-0.5
	2026	-0.6	-0.1	-0.6	-0.7	-0.4	-0.8	-1.1	-0.8
물 가	2025	-0.3	+0.6	-0.2	+0.2	-0.1	-0.1	+0.4	-0.1
	2026	-0.6	—	-0.4	-0.4	-0.4	-0.4	-0.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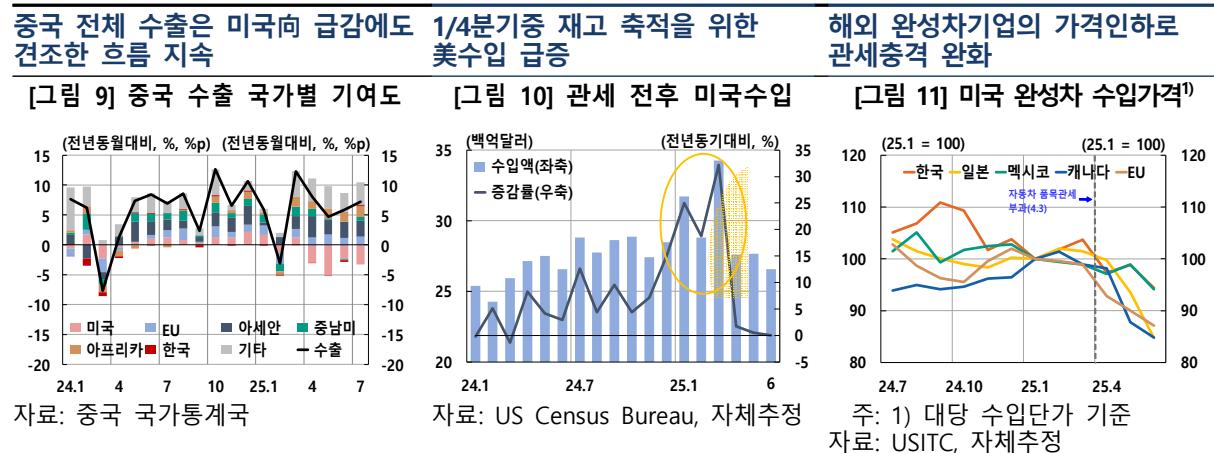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추정

## 관세 영향은 점차 가시화 전망

11. 관세부과 후 실제 美관세 영향은 이론적 예상이나 모형 결과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1/4분기에는 관세 부과전 선수요 효과로 미국의 수입미국외 국가의 對미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가 2/4분기에는 크게 줄어드는 등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국의 전체 수출은 수출전환미국외 국가간 교역 증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은 상반기중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GDP도 5.3% 성장하였다. 4월 이후 중국의 對미 수출은 큰 폭의 감소<sub>25.4~7월 -23.3%</sub>로 전환<sup>43)</sup>하였으나, 동시에 EU, ASEAN 등 여타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은 양호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내외 기업들이 재고

43) 관세유예 조치로 현재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에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을 각각 40%미→중, 트럼프2기이전 10% + 펜타닐 20% + 기본 10% 30% 중 → 미, 트럼프2기이전 20%(PIIE 기준) + 보복관세 10%로 유지하고 있다.

를 사전축적하고 관세부담을 분담하면서 관세가 물가에 제한적으로 전가되어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으며, 따라서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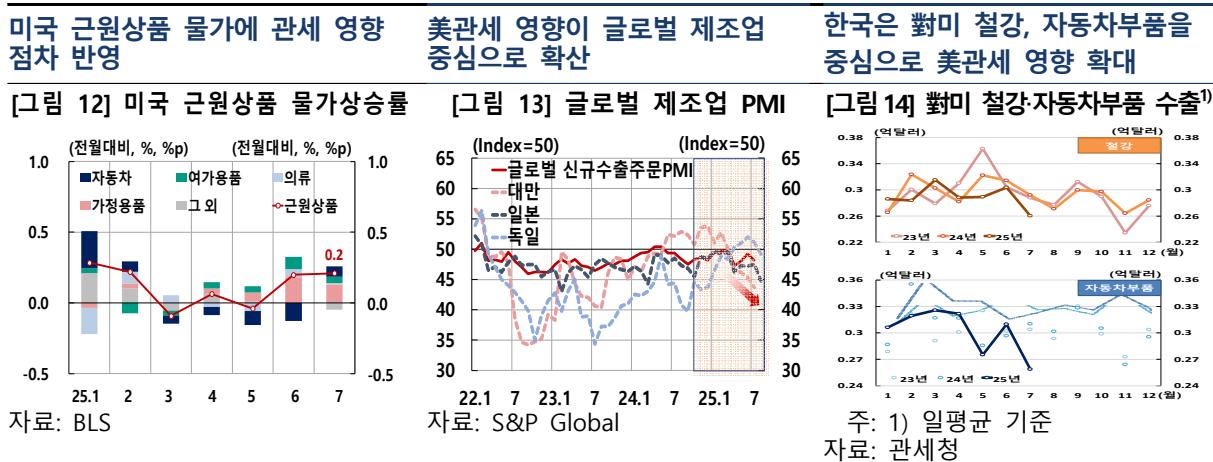


12. 그러나 최근에는 전망대로 美관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관세가 점차 전가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운동용품, 자동차부품, 가구 등 주로 관세부담이 큰 품목<sup>44)</sup>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외 국가에도 美관세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은 1/4분기중 조기선적 영향 이후 부진하며, 이로 인해 주요국 산업생산도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PMI도 4월부터 수축국면으로 돌아선 상태다. 한국의 경우 對미 철강, 자동차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sup>45)</sup>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현지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판매 호조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세로 미국내 자동차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관세 영향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sup>46)</sup> 국내 물가는 국내경기 부진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기상여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44) 품목별 실효관세율 상승폭(2월 대비 5월)은 소비재 평균 8.7%p, 여가용품(운동용품 등) 19.3%p, 자동차 및 부품 14.9%p, 가구 9.1%p 등으로 추정된다.

45) 특히 철강·금속(현재 관세율 50%)은 25.3월 관세 시행 후 약 3~4개월인 계약출하간 시차가 지난 5월경부터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일평균, 5월 -10.3% → 6월 -3.4% → 7월 -10.9%) 이에 더해 자동차 부품(25.5월 시행)도 5~7월 중 전년동기대비 감소(일평균 -6.1%)하면서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6)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관세부과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 변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이러한 판단은 현재 전제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협상의 전개, 여타국의 추가적인 대응,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이러한 리스크요인의 변화에 따라 美관세의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미·중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첨예한 갈등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보복을 감행한 국가가 일부 있으며 미국을 대체하는 시장 발굴 등을 통해 美관세 영향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sup>47)</sup>

## 시사점

14. 美관세정책의 영향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를 통해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품이 국내 경제로 대규모로 수출전환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요인이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美관세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對미투자펀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하여야 한다. 아직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을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반면, 보다 긴 시계에서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고용 위축, 인재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 돌이켜 보면 대내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양호하였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과거 위기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 속에서 기회요인을 기민하게 찾아 대응해 나간다면, 금번 충격을 다시 한 번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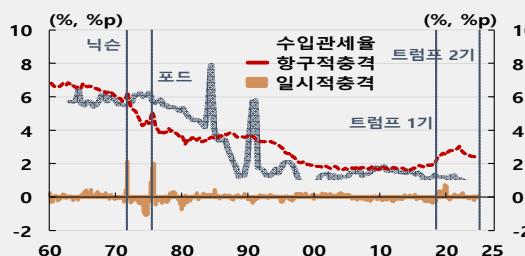
47) 美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일명 미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관세율이 20%라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는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미국의 평균관세율(15%, 8.18일 기준) 대비 추가 5%p의 인상 여지가 있다. 이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거나, 對중국 관세를 40% 남짓 더 올리는 것에 상응한다.

## 참고 1 美관세충격의 지속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차이

미국의 수입관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조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처럼 과거에도 큰 폭의 인상이 단행된 사례들이 있었다<sup>48)</sup>[\[그림 1\]](#).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수입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달러약세 달성 후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였다<sup>49)</sup>. 1975년 2월에는 포드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수입원유에 배럴당 2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의회 반대 등으로 연말에 폐지되었다<sup>50)</sup>. 이처럼 한시적으로 시행된 관세정책 하에서 수입수요가 일시 둔화되었으나<sup>51)</sup>, 당시 성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였고<sup>52)</sup>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였다<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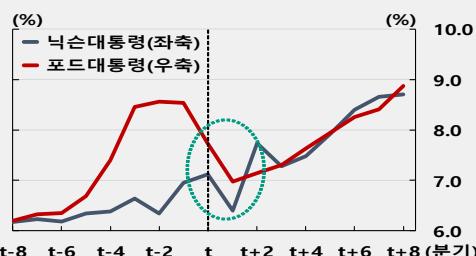
트럼프 정부 들어 기조적 하락하던 美관세율이 급등      닉슨·포드 정부 관세 부과 후 수입비중 일시 하락

[그림 1] 美수입관세율 추이<sup>1)</sup>



주: 1) 수입관세율 = 관세수입액/상품수입\*100  
자료: BEA, Schmitt-Grohé and Uribe(2025)

[그림 2] 美수입비중(GDP 대비) 추이<sup>1)</sup>



주: 1) t기는 수입관세율 인상 시기  
자료: BEA

닉슨·포드 정부 관세 부과 후 성장 안정적 흐름

[그림 3] 美GDP 추이<sup>1)</sup>



주: 1) t기는 수입관세율 인상 시기  
자료: BEA

닉슨·포드 정부 관세 부과 후 인플레이션 하락

[그림 4] 美근원물가상승률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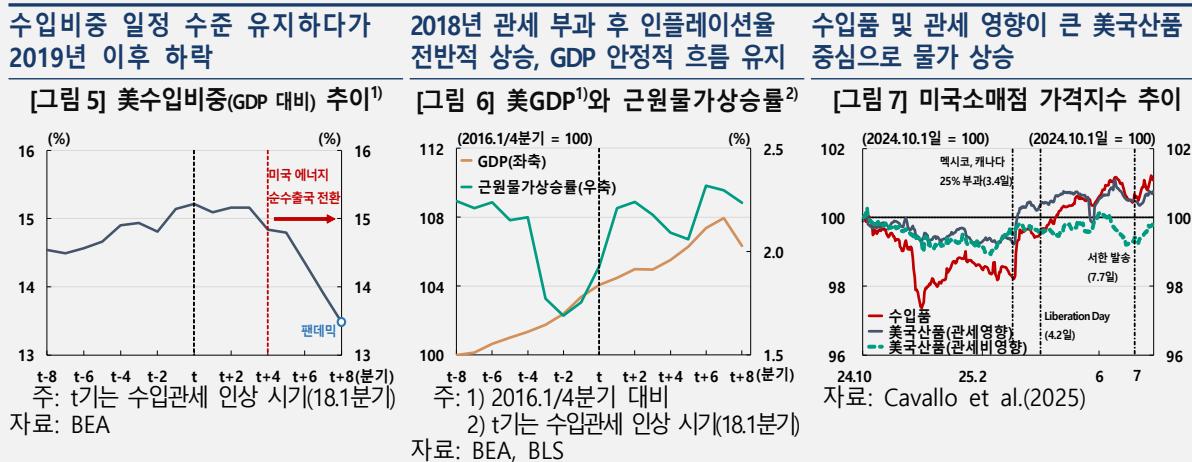
주: 1) t기는 수입관세율 인상 시기  
자료: BLS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이후 높아진 美관세율은 과거의 한시적 관세인상과 달리 지속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美·中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도입한 對중 관세조치는 바이든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기조 변화는 경제변수의 흐름에서도 닉슨·포드 시기와 차별화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8년 對중 관세 부과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수입비중이 일정 기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sup>51)</sup>[\[그림 5-6\]](#).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층 높아진 관세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sup>52)</sup>[\[그림 7\]](#).

48) Irwin(2020)에 따르면 미국 관세는 세수 확보, 국내 산업 보호, 상대국 무역장벽 감축이라는 3가지 목적하에 부과되었다.

49) Irwin(2013), "The Nixon Shock after Forty Years: The Import Surcharge Revis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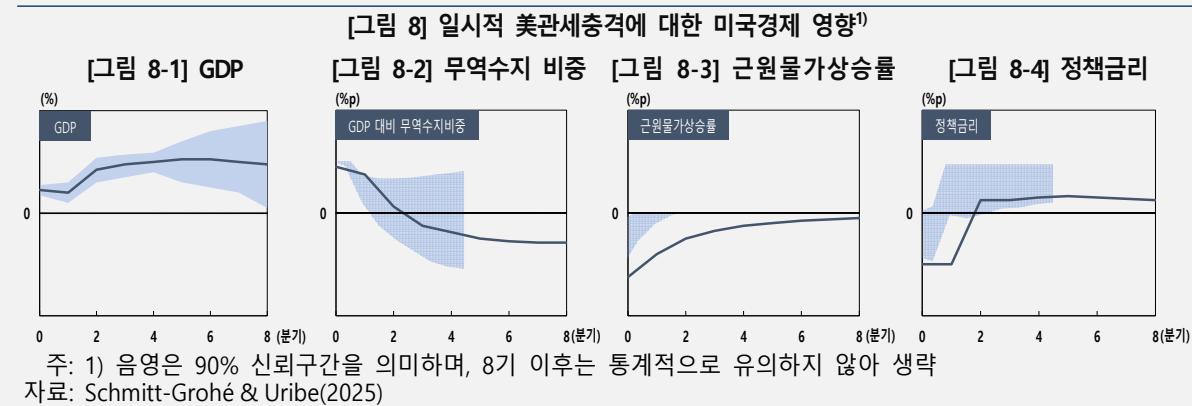
50)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중동산 원유 의존도 급증으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자, 포드 대통령은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를 통해 국내 원유 가격을 방어하고 미국산 원유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에너지 독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파트너국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말에 폐지되었다.



이처럼 美수입관세 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그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변동은 대부분 일시적 성격을 띠었고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으나<sup>52)</sup>, 최근처럼 고율의 관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Schmitt-Grohé&Uribe(2025)가 상태공간 state-space 모형을 통해 美관세 변화를 일시적·항구적 충격으로 분해[그림 1]하여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세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 성장 및 물가, 통화정책 등 전반적인 거시지표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일시적 관세 충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3)54)</sup>[그림 8]. 무역수지 개선은 관세 부과가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될 때 경제주체들이 관세 철회 시점까지 수입을 연기하는 기간간 대체 intertemporal substitution 행태를 보이는 데 기인한다. 반면 항구적 충격은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확대 물가수준 영구적 상승<sup>55)</sup>과 단기적 통화긴축을 수반하지만, 무역수지에는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그림 9]. 관세가 항구적으로 높아질 경우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재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되나, 통화긴축에 따른 달러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수출도 동반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된다<sup>55)</sup>.

#### 일시적 美관세충격: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고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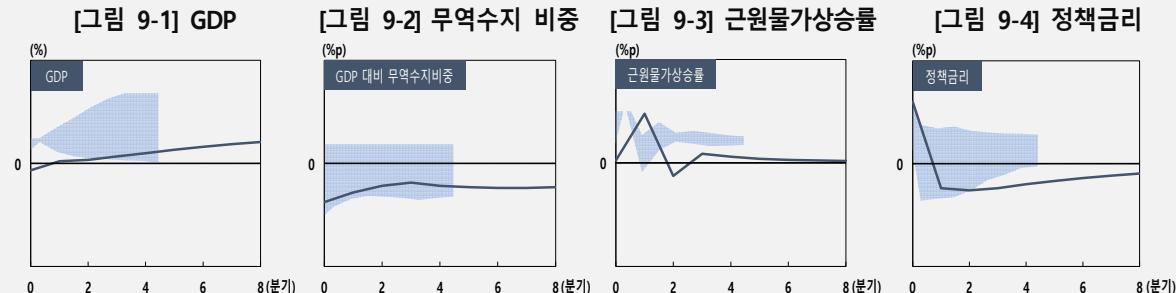


51) 2018.1/4분기(t) 미국의 관세부과 이후 대체로 안정되던 美수입비중은 2019.1/4분기(t+4)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9년 미국의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의 전환(EIA 2024, Yücel et al. 2019)과 2020.1/4분기(t+8)에 발발한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급격한 위축(BEA 2021)에 주로 기인한다.

52) Schmitt-Grohé & Uribe(2025) 분석 결과, 美관세 변동의 약 80%가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되어 역사적으로 관세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주로 일시적 충격의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경기변동에서 관세충격이 차지하는 정도도 미미하

## 항구적 美관세충격: 미국 내 일회성 인플레이션 확대 유발하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

[그림 9] 항구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미국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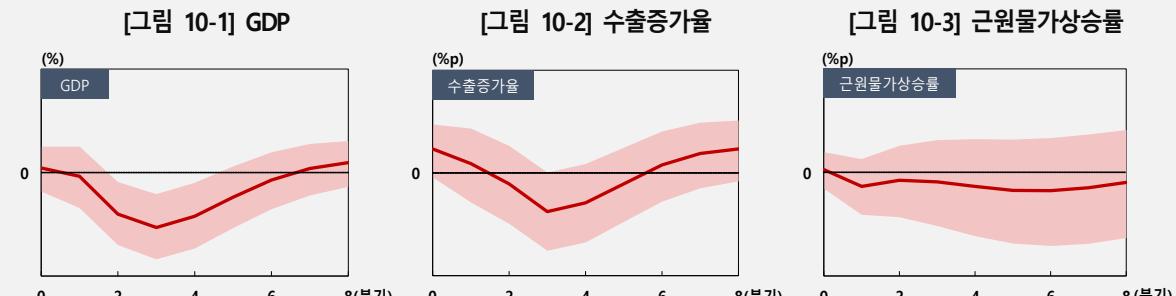


주: 1)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8기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생략  
자료: Schmitt-Grohé & Uribe(2025)

**美관세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충격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Schmitt - Grohé & Uribe(2025)을 통해 식별된 美관세의 일시적/항구적 충격을 외생변수로 활용한 구조 VAR 모형을 추정<sup>56)</sup>한 결과, 일시적 관세충격은 우리 수출에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그림 10:12]</sup>.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對미 수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관세 철회에 대한 기대로 수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공급망 조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 둔화는 성장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지만 일시적 충격의 특성상 그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우리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그림 10]</sup>.

## 일시적 美관세충격: 일시적 수출둔화 통해 우리 성장의 하방압력 작용

[그림 10] 일시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우리경제 영향<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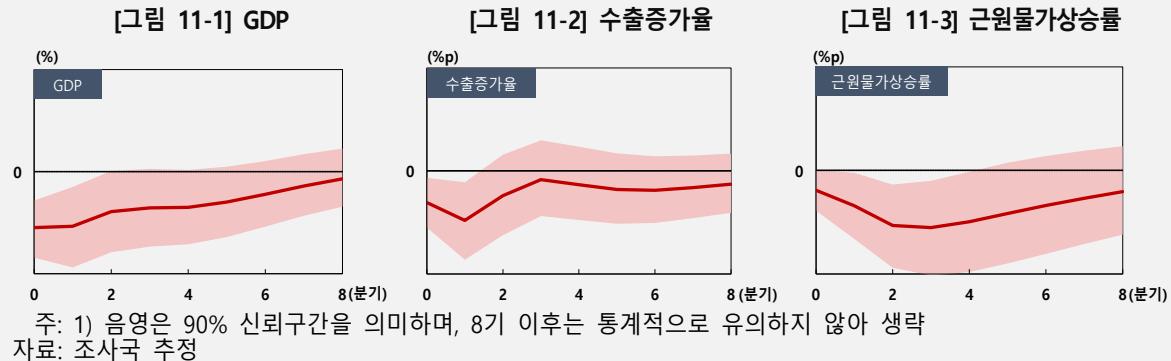
주: 1)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8기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생략  
자료: 조사국 추정

게 나타났다.

- 53) Cavallo et al.(2021)에 따르면 일시적 관세 충격에 대해 수입업자가 마진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인상분을 완전히 전가하지 않을 수 있어 관세 인상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54) 일시적 관세 충격에 대한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적인 반응에 대해 Schmitt-Grohé & Uribe(2025)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관세 상승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명목가격의 일반적 상승이다. 상대가격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지속성, 마크업 행태, 총수요, 통화정책 스탠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
- 55) Auer, Rognlie, & Straub (2025), "The Macroeconomics of Tariff Shocks"
- 56) 구조 VAR 모형은 미국 수입관세 충격, GDP, 무역수지 비율(GDP 대비),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균원물가상승률, 정책금리를 구성된다. 또한, 대외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외생블록(block exogeneity)으로 미국의 GDP, 균원물가상승률, 정책금리를 포함하였다. 모형내 GDP는 HP필터로 추출한 순환변동치를 사용하였다. 모형 추정기간은 2000.1/4분기부터 2024.4/4분기이며, 시차는 2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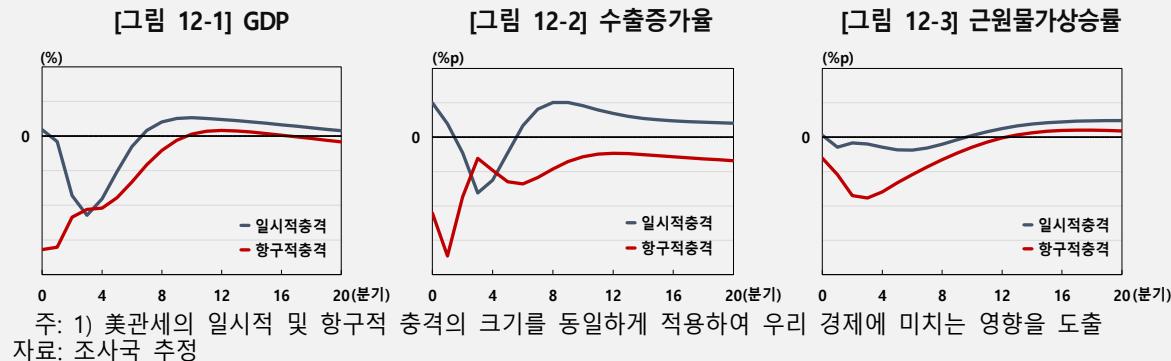
## 항구적 美관세충격: 수출의 구조적 둔화에 더해 금융경로 통해 우리 성장 및 물가상승률 둔화

[그림 11] 항구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우리경제 영향



## 항구적 美관세충격 하에서 성장·물가·수출에 대한 하방압력 더 크게 나타남

[그림 12] 美 일시적·항구적 관세충격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비교<sup>1)</sup>



반면 항구적 관세충격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관세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며 생산기지 이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수출은 일시적 충격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며, 그 영향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이와 같은 수출의 구조적 둔화는 성장과 물가에 하방압력을 가하며, 여기에 미국의 물가상승과 통화긴축이 글로벌 금융 여건 악화를 통해 국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美관세충격의 지속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 및 영향의 크기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일시적 관세충격은 주로 무역경로를 통해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항구적 충격은 무역경로뿐 아니라 금융경로를 통해서도 보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하방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관세로 보호받는 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형성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사회적 명분이 결합되면서 정치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지속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美관세정책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 대응을 넘어 수출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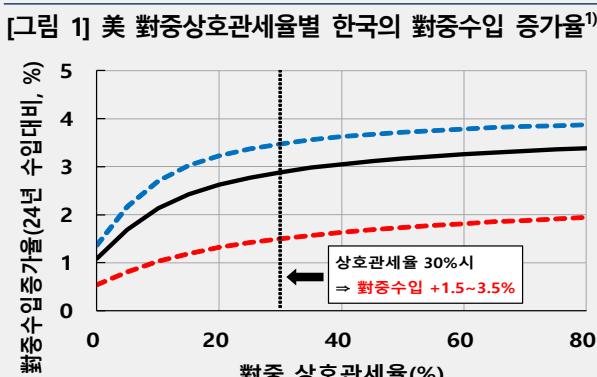
## 참고 2 중국 수출전환(redirection)이 한국 對중 수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對중 관세가 인상되어 對중 수입이 감소할 경우, 중국산 공산품이 우리나라로 수출전환되며 추가적인 물가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sup>57)</sup> 중국내 부동산 디레버리징 등으로 내수 증대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對미 수출 감소로 인한 초과공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로 저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세부 품목별 예상 관세율과 수입의 관세탄력성을 감안하여, 전체 對중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의 수입감소를 추정<sup>58)</sup>한 결과, 對중 상호관세율을 30%로 가정시 미국의 對중 수입은 24.7%저탄력성에서 56.9%고탄력성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對미수출 감소분이 여타 교역국으로 수출전환된다고 가정시, 우리나라의 對중 수입은 최대 1.5~3.5% 증가가 예상된다.<sup>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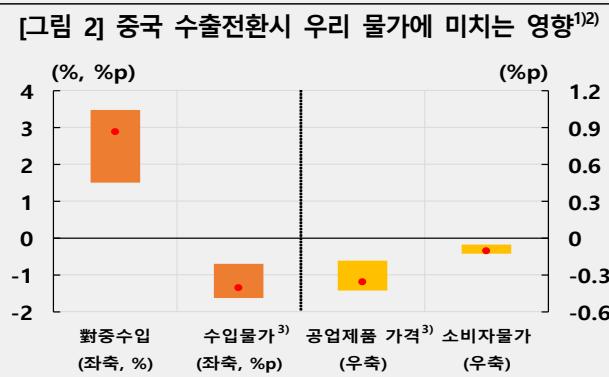
이러한 중국산 제품의 수출전환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Bayesian VAR(BVAR) 모형을 활용<sup>60)</sup>해 이러한 물가하락 영향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수출전환으로 對중 수입이 최대 1.5~3.5% 증가<sup>61)</sup>할 경우 우리나라 공산품 수입물가 상승률은 0.7~1.6%p,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5~0.1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2)</sup>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파급은 단기에 집중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최대 1년까지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對중 수입 감소로 수출전환이 예상



[그림 1] 美 對중상호관세율별 한국의 對중수입 증가율<sup>1)</sup>

수출전환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5~0.12%p 하락



[그림 2] 중국 수출전환시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sup>12)</sup>

주: 1) Boehm et al.(2023) 등 최근 4개 연구의 관세에 대한 수입탄성치 상·하한과 평균치를 적용

자료: UN Comtrade, US Census Bureau, 자체 추정

주: 1) 미국의 對중상호관세는 30%로 가정

2) 점은 수입의 관세탄력성의 기본에, 박스는 탄력성의 상·하한에 상응하는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냄

3) 수입물가(공산품),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기준

자료: Boeckelmann et al.(2025)을 원용하여 자체 추정

57) 트럼프 1기 정부(2017~20년)의 對중관세 부과로 중국의 對미 수출은 한국, EU, ASEAN, 인도 등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25.6월)」 BOX C를 참조하기 바란다.

58) Boeckelmann et al.(2025)의 방법을 확장하여 세부품목(HS10)별 관세율과 Boehm et al.(2024) 등 4개 연구가 추정한 미국 수입의 관세탄력성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입감소분을 계산하였다. 국가별 수출전환액은 미국의 對중수입 감소분이 중국의 수출구조(2024년 기준)에 맞춰 여타국에 모두 수출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59) 54%의 對중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對중 수입은 29.7~62.0%까지 감소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對중수입은 1.8~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24년 대비 기준). 다만 여기에는 우리경제의 수출·내수 위축에 따른 유발수입감소 효과는 감안되지 않았다.

60) Boeckelmann et al.(2025)를 원용하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물가는 중국 및 세계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61) 중국 산업생산과 수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안정적인 장기관계를 감안하여 BVAR 모형상 식별된 산업생산 +1.0%p 공급충격이 중국 수출 +1.8%p 충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62) 수출전환의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석유류 제외)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 (0.18~0.42%p 하락)을 추정한 후,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내 가중치(29.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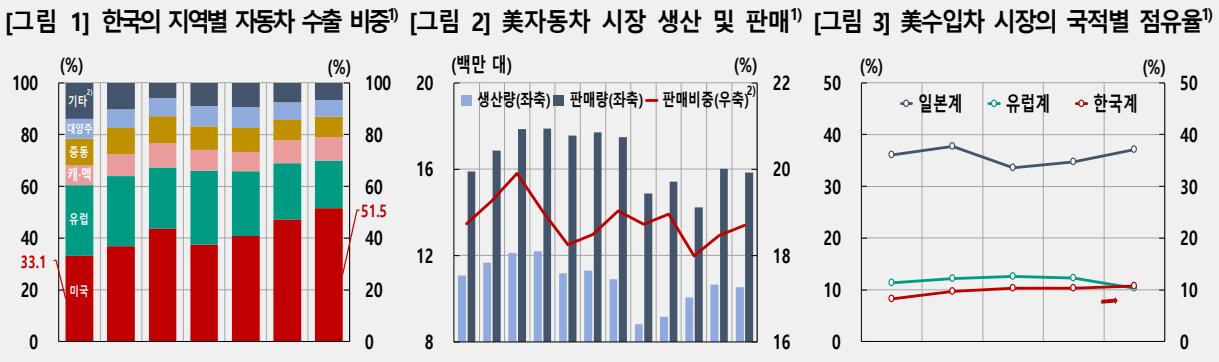
### 참고 3 관세부과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 변화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sup>25.7.30</sup>되면서 향후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2012년 3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EU 등 **對미수출 경쟁국에 대한 비교우위도 사라지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4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sup>물량기준</sup>의 절반을 넘어서는 51.5% 제1의 수출 시장인 만큼 [그림1],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對미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에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최근 동향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美시장 내 경쟁력 변화에 대해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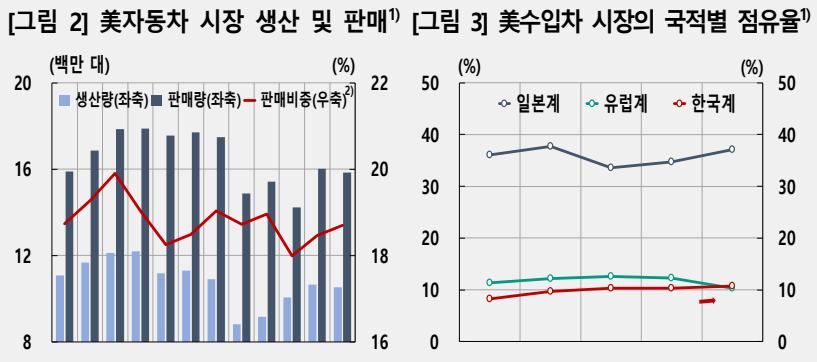
#### 미국 자동차 시장의 최근 동향

2024년 미국의 자동차 시장 **내수판매** 기준은 전세계 18.7%로 중국 29.1%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sup>63)</sup>.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산과 내수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4년 생산은 1,052만대, 내수판매는 1,585만대를 기록하였다. [그림2] **美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내연기관차가 80%, 전기동력차 BEV, PHEV, FCEV 및 하이브리드 차 HEV가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동력.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sup>20년 5.2% → 24년 20.0%</sup>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국적별 내수판매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계 GM, Ford, Tesla, Stellantis 등 41.8%, 일본계 Toyota, Honda, Nissan 등 37.1%, 한국계 현대자동차, 기아 10.8%, 유럽계 BMW, Audi, M-Benz, Volvo 등 10.3%**로 우리 기업들은 일본계, 유럽계 기업들과 **美수입차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준중형SUV, 전기동력.하이브리드차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품질 향상,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힘입어 **美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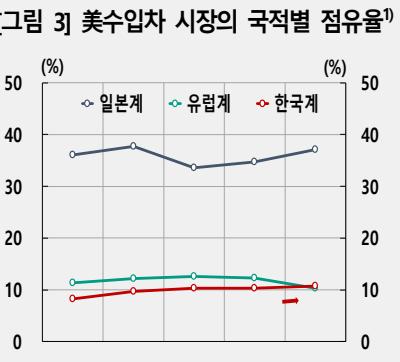
미국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제1 수출 시장



미국의 자동차 내수시장은 세계 2위 규모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중



美수입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점유율은 최근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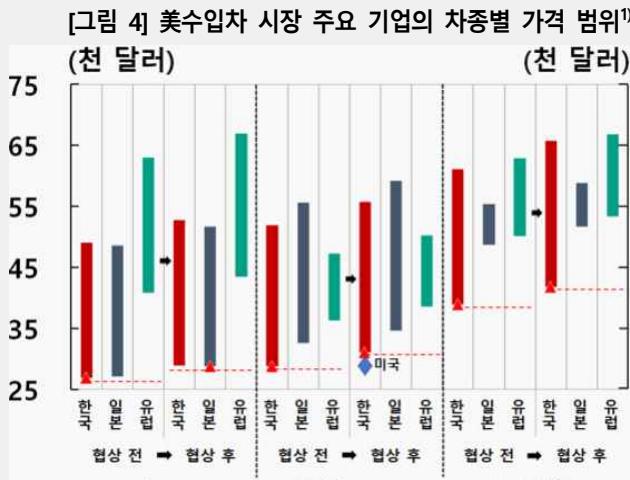
63) 한편,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생산규모는 전세계 11.3%로 세계 2위이며, 중국이 세계 1위(32.0%)이다.

## ■ 자동차 경쟁력 변화: ①가격, ②품질, ③공급망

美관세부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sup>64)</sup>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변화는 판매 측면에서의 ①가격, ②품질, ③공급망 경쟁력을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①가격 경쟁력<sup>65)</sup>은 국적별 주요 기업들이 수출 및 현지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종별 가격 범위<sup>66)</sup>를 통해 살펴보았다[그림4]. 세단Sedan은 현재 한국계와 일본계 기업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동일 관세율이 적용한국: 0→15%, 일본: 2.5→15%되고 가격인상이 나타나면서, 동급 차량중 최저가 차량이 한국계 기업이 아닌 일본계 기업 생산차량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들의 주력 품목인 SUV 차량은 현재 일본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우위가 커서 동일 관세율 적용시에도 이러한 우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가 없는 미국산 차량의 최저가격보다는 한국산 차량의 최저가격이 높아져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친환경차전기동력.하이브리드차는 美관세부과에도 가격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부담의 50%를 가격에 반영할 경우, Sedan·SUV·Van 차종에서 최저가격 차량이 일본계(세단) 및 미국계(SUV, Van)로 바뀌게 되어 한국계 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



주: 1) 동일 차종별 동급 차량들의 권장소비자가격 범위(최소~최대)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수입국 중 최저가격 수준을 점선으로 표시  
\* 미국계(전=후) = 105.8

자료: S&P Global(MarketScan), 조사국 시산

[표 1] 美수입차시장의 차종별 최저가격

차종	국적별	관세협상 전	관세협상 후
Sedan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01.0	107.2
	유럽계	152.2	161.7
SUV /Crossover * 미국계(전=후) = 105.8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13.2	120.3
	유럽계	126.0	133.9
Eco Vehicle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25.0	132.8
	유럽계	128.9	137.0
Van * 미국계(전=후) = 105.3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07.4	114.1
	유럽계	145.6	154.7

주: 1) 주요 차종별 동급의 2025년 권장소비자가격 평균 기준 (관세협상 전 한국계=100으로 표준화)  
2) 관세협상에 따른 추가부과 관세율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 인상을 가정

3) 파란색은 최저가격을 표시  
자료: S&P Global (MarketScan), 조사국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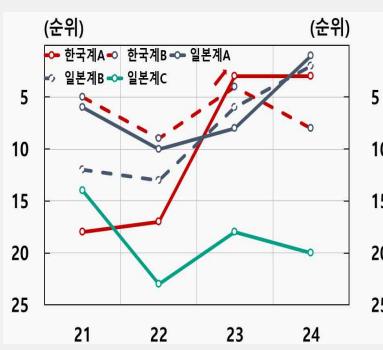
- 64) 반면, 미국계 자동차 기업은 관세부과로 한국·일본·유럽계 기업들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졌다. 예를들어, 관세협상 전 SUV/Crossover, Van 차종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평균이 최저인 모델은 한국계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었으나, 관세협상 결과를 적용할 경우 미국계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5) 미국이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완성차를 수출하는 기업은 일부는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일부는 부품기업 및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금번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급 구조와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발표한 가격인상 경향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관세율의 절반 수준(한국 7.5%, 일본 및 EU 6.25%)을 가격 인상률에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 66)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차종별 2025년 권장소비자가격(MSRP) 기준이며, 각 차종의 트림별(옵션.사양구성에 따른 등급) 가격 차이가 있어 평균을 적용하였고 개별적인 딜러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았다. 가격 범위는 각 국적별 주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종별 동급(크기[Segment] C, D 기준)의 주요 차량 모델들 가격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② **품질비가격 경쟁력**은 자동차 브랜드별 초기 품질과 장기 내구 품질의 비교우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한국계 자동차의 초기 품질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나, 일본계 주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 [그림5]된다. 또한, 한국계 자동차의 내구 품질은 최근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 [그림6]되는데, 장기적인 설비 및 R&D 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는 관세비용 이외의 또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③ **공급망 경쟁력**은 국적별 주요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를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관세부담 없이 미국 현지생산 공정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계 및 유럽계에 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완성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7]. 또한, 주요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생산 차량에 대해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비율도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7)</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관세부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생산비용 증가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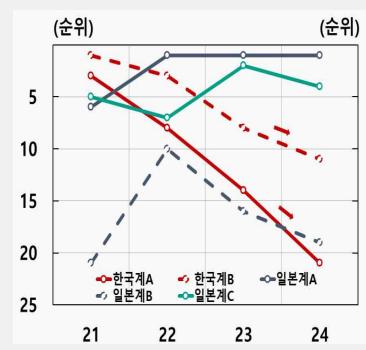
### 최근 한국계 자동차 브랜드의 초기 품질 경쟁력은 상승세이나, 내구 품질 경쟁력은 하락세

[그림 5] 국적별 주요 브랜드의 초기 품질경쟁력 순위<sup>1)</sup>



자료: J.D. Power 각년도

[그림 6] 국적별 주요 브랜드의 내구 품질경쟁력 순위<sup>1)</sup>



자료: J.D. Power 각년도

### 우리 기업들의 美 현지생산 비중은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

[그림 7] 주요 국적별 자동차 현지생산<sup>1)</sup> 비중



주: 1) 현지생산 비중은 주요 기업의 미국 시장 판매량 대비 현지생산 비율

자료: Ward Intelligence, KAMA, 조사국 시산

## 종합평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이 받는 영향은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美현지생산 공급망도 이들보다 취약해 생산비용 증가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美현지생산 공급망 구축과 품질 제고를 위해 對미 설비 및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감소가 구조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중장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67)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미국 내 생산차량의 부품 현지 조달률을 한국계 기업(현대기아차 48.6%)이 경쟁국인 일본계 기업(Honda 62.3%, Toyota 53.7%)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산업연구원, 25.6월).

#### 참고 4 美관세협상에 대한 주요 기관<sub>중앙은행·IB 등</sub>들의 평가

우리보다 먼저 美관세협상을 합의한 주요국<sub>EU·일본·영국</sub> 中央은행들은 최근 미국과 자국간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논평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의 관세협상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과정 등에 의존하므로 구체적 평가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sub><FYI></sub> 참조. 아울러, 관세 합의가 협상 직전 대비로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전과 비교하면 무역비용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IB 및 외신들은 협상 타결로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교역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U와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인상<sub>10%→15%</sub>되었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sub>25%→15%</sub>가 이를 대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sup>68)</sup>되고 협상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협상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sub>는</sub> 對美수출 비중<sub>34%, 24년기준</sub>이 높은 자동차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협상 직전 대비 평균관세율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sup>69)</sup>. 다만, 기존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2.5%p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음에도 금번 합의로 양국 모두 동일한 관세<sub>15%</sub>를 적용받게 된 점은 한국 자동차기업에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경우 협상전 美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에서, EU와 같이 최혜국 대우 보장을 합의사항에 반영했다는 점은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비관세 분야 합의내용 중 하나인 천억달러 규모의 美에너지<sub>LNG</sub> 수입은 한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sup>70)</sup>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sup>71)</sup>. 對美 투자펀드의 경우 집행방식·시점·기간, 수익배분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단계에서 평가는 이르다는 견해가 공통적이다.

시장참가자들도 이번 무역협상이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되었으며 이는 향후 주요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상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주요 협상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sup>72)</sup> 협상국내 기업이나 일반국민 역시 금번 협상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통상환경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데 안도하며 대체로 협상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sup>73)</sup>.

68) EU와 일본의 對미수출액 중 자동차 비중(2024년 기준)은 각각 11%, 35%이다.

69) 한·미 협상 이후 일부 IB들은 한국의 성장을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GS: +0.1pp)하거나, 관세로 인한 GDP 감소분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조정(Barclays: 114bp→105bp)하였다.

70) 24년 對미 에너지 수입은 232억달러로, 지난해말 종료된 중동산(오만·카타르) 장기계약 종료분(연간 56억달러 추정)의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목표 4년 이내에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1) 그 외에 에너지 운송거리 확대에 따른 에너지기업의 운송비용 증가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과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72) 협상 발표 당일 STOXX50는 1% 수준까지 상승한 후 일부 조정(0.4%)되었으며, 낫케이지수도 전일대비 약 1.2% 상승하였다.

73) 美·일간 관세협상 타결 발표 직후 Reuter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41개 기업 응답)에서 응답업체의 75%는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세협상 직후 진행된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다(리얼미터 등).

이처럼 주요기관에서는 관세협상 합의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美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협상 합의내용의 세부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양국간 해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의 경우 실제 세율·적용범위·부과시기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과 번복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요국과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정책 신뢰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여전히 관세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경우 **對美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 여타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다른 국가로 **수출전환**을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ECB에서는 중국의 **對미-對유럽 수출 구조가 유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긴장이 지속될 경우 유럽내 중국산 수입이 7~10% 증가<sup>74)</sup>해 향후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FYI>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 코멘트

(ECB) ECB는 미-EU간 관세 합의가 “일정한 진전(some progress)”을 의미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글로벌 교역 변동성이 지속되겠으며,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세계교역과 경제활동 전망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25.8월, Economic Bulletin)

(UK) Bailley 총재는 英·美협상 타결이 “좋은 소식(good news)”이지만, 실효 관세율은 관세 부과 전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덧붙여, 이번 미영협상 결과의 경제적 영향은 이번 합의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국가들의 협상결과에도 좌우된다고 언급하였다. (25.5월, Economic conference-Q&A session)

(BOJ) Ueda 총재는 美·日협상 타결은 “중대한 진전(big step forward)”이며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세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무역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It is not as if the fog will all clear at once”) 밝혔다. (25.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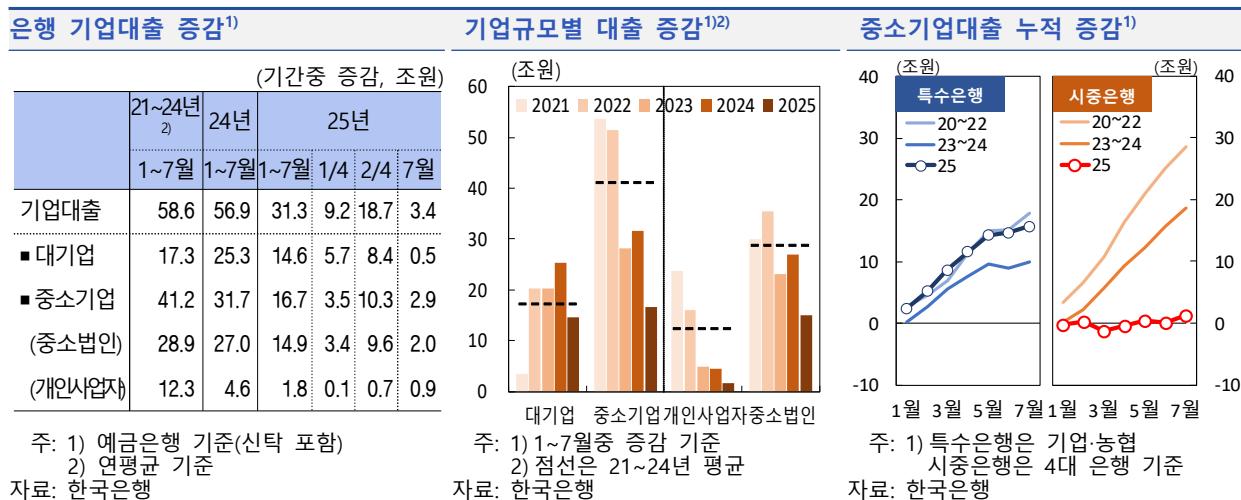
74) 부분균형모형(Boehm et al., 2023) 추정 시 최대 10%, 일반균형모형(Baqae and Farhi, 2024) 추정 시 7~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4. 최근 기업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점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1. 금년 들어 기업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와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금년 1~7월 중 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31.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9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기업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도 7월 3.2%로 하락하며 2017년 7월(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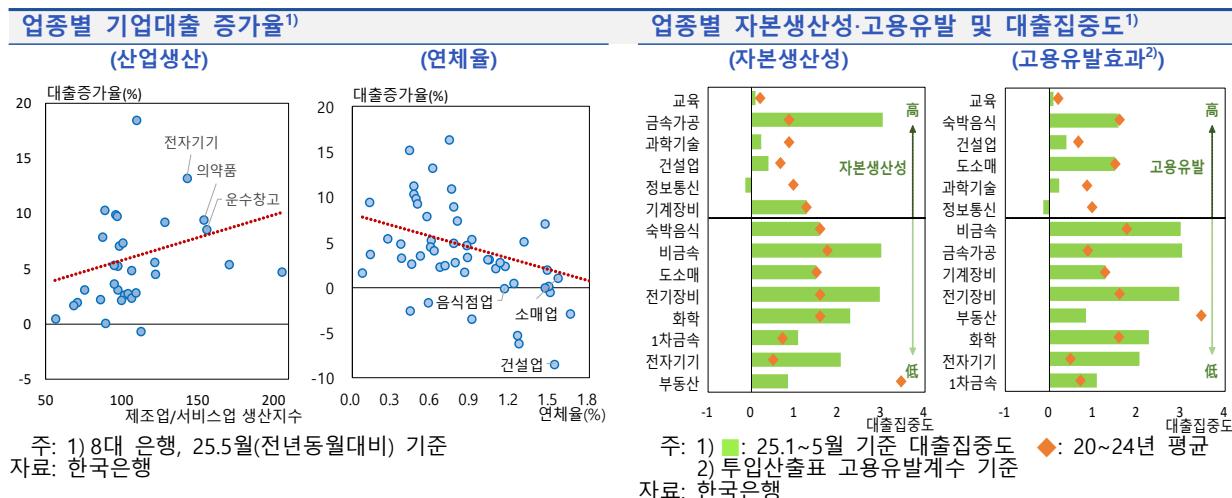
2. 먼저,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대출이 대기업대출보다 더 크게 축소되었다. 금년 1~7월 중 대기업대출 증가규모는 14.6조원으로 예년(21~24년 평균 +17.3조원)의 85% 정도인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규모는 16.7조원으로 예년(41.2조원)의 4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개인사업자대출(+1.8조원)은 예년(+12.3조원)의 14%에 그쳤다. 은행별로 보면, 중소기업대출의 대부분(88.0%)을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14.7조원)이 취급하였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체율 상승<sup>75)</sup>, 자본비율 관리 필요성 등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영업을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3. 업종별로는 업황 및 연체 상황에 따라 기업대출 증가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자기기·의약품 등 업황이 양호한 부문의 기업대출은 비교적 견조했던 반면 건설·도소매업 등 경기에 민감하고 연체율도 높은 업종은 대체로 부진하였다. 한편, 신용공급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살펴보면,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은행들의 디레버리징 노력 등으로 그간 크게 높았던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sup>76)</sup>는 상당폭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75) 금년 5월말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5%로 2016.5월(0.95%)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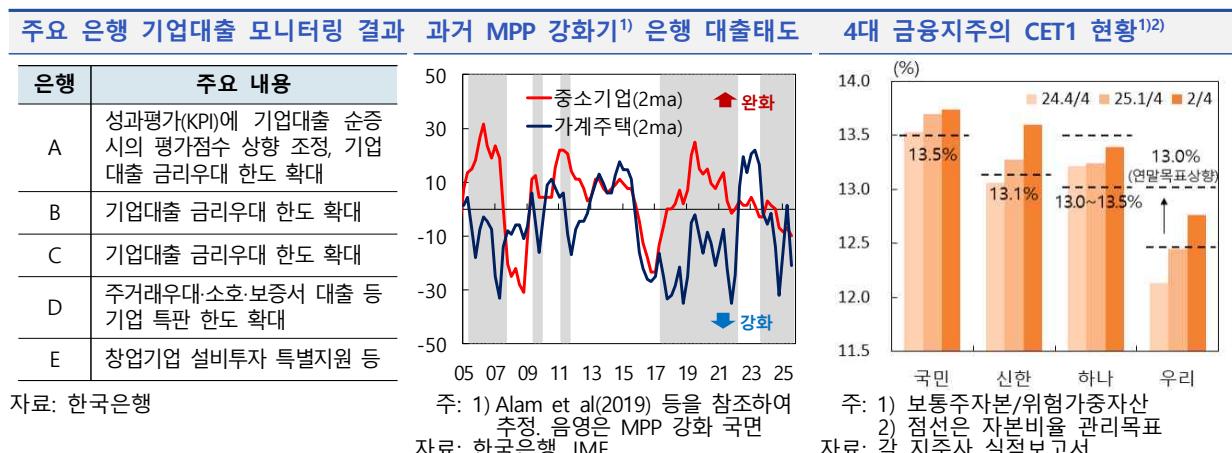
76) 업종별 대출집중도=(업종별대출÷총기업대출)/(업종별GDP÷전체GDP), 1보다 클수록 대출공급이 업종별 부가가치 등에 비해 신용공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향후 기업대출 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6.27 대책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기업대출 공급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축소됨에 따라 대출자산의 성장성 관리를 위해 그간 실적이 저조했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7월 들어 주요 은행들은 금리우대 한도 확대 등 중기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가계부문 거시건전성정책(MPP)이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최근 은행들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도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주요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그간의 위험가중자산(RWA) 축소 노력, 자기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상당 폭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하반기에는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반기에 비해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다만 은행들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수적인 신용리스크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의 신규연체 발생 지속, 금리하락 기조 등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sup>77)</sup>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77) 전체 수신에서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는 저금리 수시입출식예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금리하락(상승)기 감소(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7. 요약하면, 금년 들어 기업대출은 은행들의 강화된 신용리스크 관리 등으로 기업규모, 업종별로 차별화되면서 둔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대출 취급행태는 경기둔화기 기업 수익성 악화, 은행 이자수익 감소 등에 대응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금년에는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연체율 급등세 등이 가세하면서 차별화 정도가 다소 뚜렷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8. 금년 하반기에는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업 대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리스크 관리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관세 영향 본격화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취약업종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과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II. 주요 통계 및 참고자료



## 주요 통계 및 참고자료 목차

### 1. 실물경제

- II-1. 미국, 유로, 한국 등 주요국 경제전망 비교 표
- II-2. 원유 · 천연가스 선물가격 동향
- II-3. 무역수지, 경상수지 규모 및 GDP대비 비중
- II-4.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주요국 비교

### 2. 금융시장

- II-5.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및 변동폭 비교
- II-6. 한 · 미 금리차 현황
- II-7. 우리나라 및 미국 장단기금리차
- II-8. 한 · 미 금리역전기 사례
- II-9. 주요국 수익률 곡선
- II-10. 주요국 회사채 및 CP 신용스프레드 비교
- II-11. 주식시장 PER
- II-12. 중동 무력 분쟁 이후 국제금융시장 지표

### 3. 외환시장

- II-13.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
- II-14. CDS프리미엄 및 KP스프레드 추이

### 4. 금융안정 상황

- II-15. 기준금리 수준별 경제주체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 II-16. 부동산가격 동향
- II-17. 은행 예대금리차
- II-18.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주택가격 변동

## II-1. 미국, 유로, 한국 등 주요국 경제전망 비교 표

조사국 조사총괄팀

		한국				미국			
		23년	24년	25년 <sup>e)</sup>	26년 <sup>e)</sup>	23년	24년	25년 <sup>e)</sup>	26년 <sup>e)</sup>
GDP	당행(8월)	1.6	2.0	0.9	1.6	2.9	2.8	1.7	1.9
	IMF(7월)			0.8	1.8			1.9	2.0
	OECD(6월)			1.0	2.2			1.6	1.5
	블룸버그(8월) <sup>1)</sup>			1.0	1.8			1.6	1.7
물가	당행(8월)	3.6	2.3	2.0	1.9	4.1	2.9	-	-
	IMF(4월)			1.8	1.8			3.0	2.5
	OECD(6월)			2.1	2.0			3.2 <sup>2)</sup>	2.8 <sup>2)</sup>
	블룸버그(8월) <sup>1)</sup>			2.0	1.9			2.8	2.7

주: 1) 중간값 기준 2) PCE 기준

		유로				중국			
		23년	24년	25년 <sup>e)</sup>	26년 <sup>e)</sup>	23년	24년	25년 <sup>e)</sup>	26년 <sup>e)</sup>
GDP	당행(8월)	0.6	0.9	1.1	1.1	5.4	5.0	4.7	4.1
	IMF(7월)			1.0	1.2			4.8	4.2
	OECD(6월)			1.0	1.2			4.7	4.3
	블룸버그(8월) <sup>1)</sup>			1.1	1.1			4.8	4.2
물가	당행(8월)	5.4	2.4	-	-	0.2	0.2	-	-
	IMF(4월)			2.1	1.9			0.0	0.6
	OECD(6월)			2.2	2.0			-0.1	1.4
	블룸버그(8월) <sup>1)</sup>			2.1	1.9			0.1	1.0

주: 1) 중간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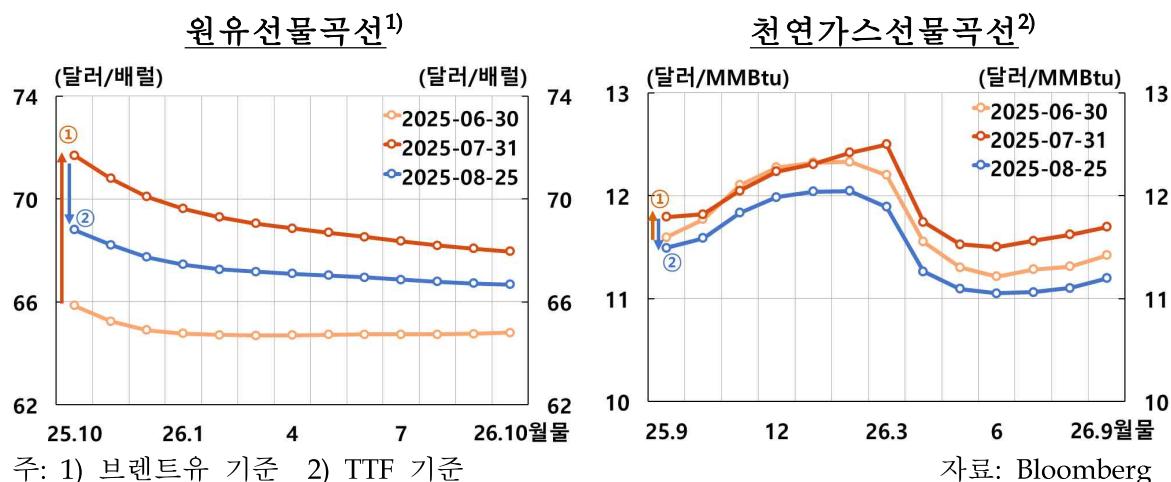
## II-2. 원유 · 천연가스 선물가격 동향

조사국 물가동향팀

- 원유(브렌트유 기준) 선물곡선은 주요국 관세협상 합의 진전 및 미-러 갈등 고조로 7월중 상방이동 했다가, 이후 OPEC+ 증산 합의\*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하방이동

\* 9월 일평균 54.7만 배럴 증산 합의(8.3일)로 18개월(25.4월~26.9월)의 단계적 증산 목표를 6개월만에 조기 달성 전망

- 천연가스(TTF 기준) 선물곡선은 7월중 미-러 갈등에 따른 공급측 우려로 소폭 상방이동 하였다가, 이후 유럽의 가스 저장량 증가 영향을 받으며 하방이동



브렌트유 선물 가격						
(달러/배럴)	25.1월 말	2월 말	3월 말	4월 말	5월 말	6월 말
최근월물(t) <sup>1)</sup>	72.27	70.43	72.04	60.32	61.57	65.86
26.1월물(t+3)	71.13	69.43	70.77	60.38	61.51	64.77
26.7월물(t+9)	69.80	68.32	69.41	61.17	62.20	64.74
26.10월물(t+12)	69.34	67.97	69.00	61.58	62.49	64.81
						7월 말 (A)
						25.08.25 (B)
						(B-A)

주: 1) 현물(spot) 가격의 대용치

자료: Bloomberg, ICE

## II-3. 무역수지, 경상수지 규모 및 GDP대비 비중

조사국 국제무역팀

- 7월 무역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sup>\*</sup>되었으나 7월 기준으로는 '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6월 +91 → 7월 +66)

\* 수출은 반도체·선박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은 자본재·소비재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

주요국 무역수지<sup>1)</sup>

	22년	23년	24년	25년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한국(억달러)	-478 <-1.2>	-103 <-2.9>	518 <2.5>	69 <1.6>	209	48	48	69	91	66
미국(〃)	-11,671 <-4.5>	-10,563 <-3.8>	-12,047 <-4.1>	-4,243 <-5.8>	-2654 <-3.5>	-1,513	-864	-933	-857	...
중국(〃)	8,890 <4.9>	8,586 <4.7>	9,931 <5.2>	2,732 <6.2>	3,142 <6.6>	1,026	962	1,032	1,148	982
일본(조엔)	-20.3 <-3.6>	-9.5 <-1.6>	-5.5 <-0.9>	-1.6 <-1.0>	-0.6 <-0.4>	0.6	-0.1	-0.6	0.2	-0.1
독일(억유로)	881 <2.2>	2,177 <5.2>	2,412 <5.6>	546 <5.0>	494 <4.5>	227	160	178	155	...
프랑스(〃)	-1,617 <-6.1>	-990 <-3.5>	-793 <-2.7>	-206 <-2.8>	-232 <-3.1>	-57	-71	-86	-75	...
이탈리아(〃)	-341 <-1.7>	340 <1.6>	548 <2.5>	89 <1.7>	140	47	24	61	54	...

주: 1) <>내는 GDP대비 비율(%), 빨간색 표기는 적자 기간

주요국 경상수지<sup>1)</sup>

	22년	23년	24년	25년				
				1/4	2/4	3월	4월	5월
한국(억달러)	258 <1.4>	328 <1.8>	990 <5.3>	193 <4.5>	301	91	57	101
미국(〃)	-9,931 <-3.8>	-9,280 <-3.3>	-11,853 <-4.1>	-4,103 <-5.6>	...	-	-	-
중국(〃)	4,434 <2.4>	2,634 <1.4>	4,239 <2.2>	1,654 <3.7>	1,351 <2.8>	-	-	-
일본(조엔)	11.4 <2.0>	22.2 <3.8>	29.4 <4.8>	7.6 <4.8>	7.0 <4.5>	3.7	2.2	3.4
독일(억유로)	1,520 <3.8>	2,328 <5.5>	2,438 <5.6>	745 <6.8>	450 <4.1>	329	189	75
프랑스(〃)	-377 <-1.4>	-294 <-1.0>	27 <0.1>	-130 <-1.8>	-207 <-2.8>	-19	-76	-147
이탈리아(〃)	-345 <-1.7>	29 <0.1>	248 <1.1>	-2 <-0.1>	81	11	6	17

주: 1) <>내는 GDP대비 비율(%), 빨간색 표기는 적자 기간

## II-4. 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주요국 비교

### 조사국 물가동향팀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중 2.1%로 전월 2.2%보다 하락, 균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월수준 유지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기준)은 7월 중 2.7%로 전월수준 유지, 균원물가는 3.1%로 전월 2.9%보다 소폭 상승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HICP 기준) 중 2.0%로, 균원물가는 2.3%로 모두 전월수준 유지

(전년동월비, %)	한국		미국(CPI) <sup>1)</sup>		유로지역	
	25.6월	25.7월	25.6월	25.7월	25.6월	25.7월
headline	2.2	2.1	2.7 <2.6>	2.7	2.0	2.0
core	2.0	2.0	2.9 <2.8>	3.1	2.3	2.3

주: 1) <>내는 미 PCE 기준

- 우리나라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은 8월 중 2.6%로 상승 7월 2.5%
- 미국은 8월 중 4.9%로 상승 7월 4.5%, 유로지역은 6월 중 2.6%로 하락 5월 2.8%
  - 장기 기대(5년앞 전문가서베이)는 모두 목표수준(2%) 부근에서 안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S, Eurostat

근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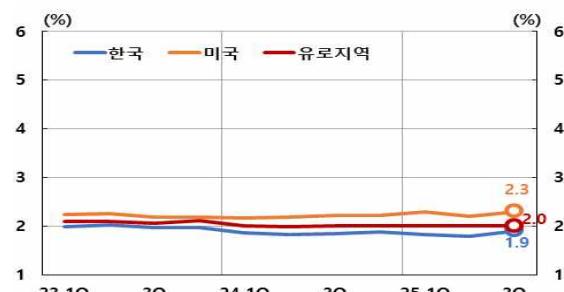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BLS, Eurostat

단기 기대인플레이션<sup>1)</sup>



주: 1) 일반인 향후 1년  
자료: 한국은행, 미시간대, ECB

장기 기대인플레이션<sup>1,2)</sup>



주: 1) 전문가 5년 앞  
2) 25.3/4분기 기준  
자료: Consensus Economics

## II-5.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및 변동폭 비교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 주요국 국채 3년물

(%, bp)

	기준금리 <sup>1)</sup>	국채금리						변동폭					
		최저	현재	2020년 이후 최저 <sup>2)</sup>	최고 <sup>2)</sup>	255월말	6월말	7월말	8.25일	최저치 대비	25년 연중	6월중	7월중
한국	0.50 2.50	0.80 (20.8.5.)	4.55 (22.9.26.)	2.35	2.45	2.46	2.43	+163	-17	+10	+1	-3	
미국	0.25 4.50	0.11 (20.8.4.)	5.22 (23.10.18.)	3.86	3.69	3.90	3.67	+356	-60	-17	+21	-23	
영국	0.10 4.00	-0.17 (20.9.21.)	5.50 (23.7.6.)	4.01	3.81	3.85	3.95	+412	-23	-20	+4	+10	
독일	0.00 2.15	-1.03 (20.3.9.)	3.34 (23.3.8.)	1.83	1.92	2.07	2.09	+312	+11	+9	+15	+2	
아일란드	0.00 2.15	-0.35 (21.8.5.)	4.18 (23.10.18.)	2.19	2.26	2.35	2.38	+273	-11	+7	+9	+3	
캐나다	0.25 2.75	0.19 (21.1.7.)	4.97 (23.9.20.)	2.65	2.65	2.82	2.76	+257	-14	0	+17	-6	
호주	0.10 3.60	0.09 (21.3.12.)	4.41 (23.11.1.)	3.33	3.26	3.42	3.38	+329	-44	-7	+16	-3	
뉴질랜드	0.25 3.00 (2년물)	-0.08 (20.9.23.)	5.81 (23.10.3.)	3.43	3.31	3.25	3.01	+309	-61	-12	-6	-24	
일본	-0.10 0.50	-0.30 (20.3.9.)	0.89 (25.3.26.)	0.81	0.78	0.88	0.95	+125	+36	-3	+10	+7	

주: 1)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 ( ) 안은 해당일자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주요국 국채 10년물

(%, bp)

	기준금리 <sup>1)</sup>	국채금리						변동폭					
		최저	현재	2020년 이후 최저 <sup>2)</sup>	최고 <sup>2)</sup>	255월말	6월말	7월말	8.25일	최저치 대비	25년 연중	6월중	7월중
한국	0.50 2.50	1.28 (20.7.30.)	4.63 (22.10.21.)	2.79	2.81	2.79	2.85	+157	-1	+2	-2	+6	
미국	0.25 4.50	0.51 (20.8.4.)	4.99 (23.10.19.)	4.40	4.23	4.37	4.28	+377	-29	-17	+14	-9	
영국	0.10 4.00	0.08 (20.8.4.)	4.89 (25.1.14.)	4.65	4.49	4.57	4.69	+461	+12	-16	+8	+12	
독일	0.00 2.15	-0.86 (20.3.9.)	2.97 (23.10.3.)	2.50	2.61	2.70	2.76	+362	+39	+11	+9	+6	
아일란드	0.00 2.15	0.46 (21.2.11.)	4.98 (23.10.18.)	3.48	3.48	3.51	3.60	+314	+8	0	+3	+9	
캐나다	0.25 2.75	0.43 (20.8.4.)	4.24 (23.10.3.)	3.20	3.27	3.46	3.47	+304	+24	+7	+19	+1	
호주	0.10 3.60	0.61 (20.3.9.)	4.95 (23.11.1.)	4.26	4.16	4.26	4.28	+367	-8	-10	+10	+2	
뉴질랜드	0.25 3.00	0.45 (20.9.28.)	5.57 (23.10.19.)	4.57	4.54	4.51	4.37	+392	-4	-3	-3	-14	
일본	-0.10 0.50	-0.16 (20.3.9.)	1.63 (25.8.22.)	1.50	1.43	1.56	1.62	+178	+52	-7	+13	+6	

주: 1)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 ( ) 안은 해당일자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II-6. 한·미 금리차 현황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 한·미 금리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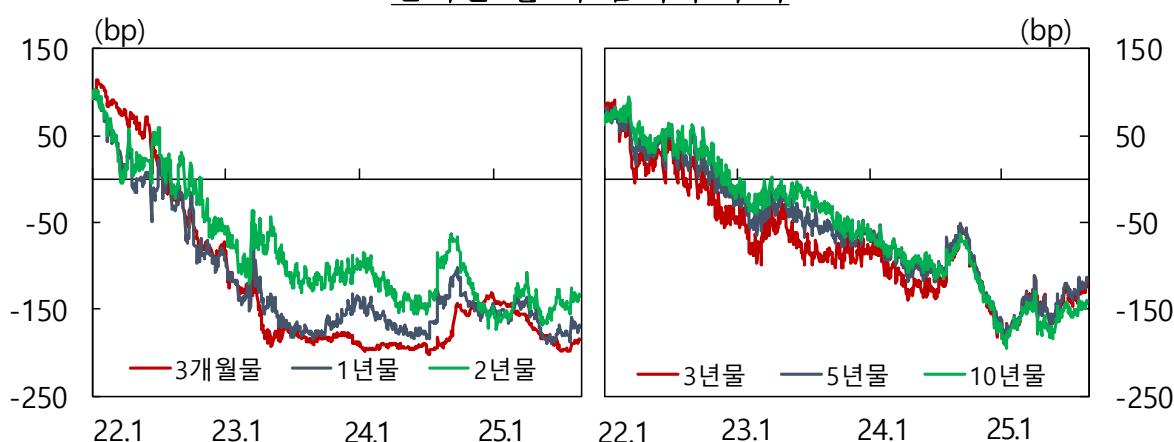
	한·미 국채 금리							(bp, %) 금리[8.25일]	
	00년 이후 최저치	22년이후 최저치	25.4월 말	5월 말	6월 말	7월 말	8.25일	한국	미국
정책금리 <sup>1)</sup> (23.7.26.)	-200	-200	-175	-200	-200	-200	-200	2.50	4.50
3개월 <sup>2)</sup> (24.7.8.)	-202	-202	-174	-185	-192	-199	-186	2.33	4.19
1년 <sup>2)</sup> (25.5.28.)	-189	-189	-148	-183	-175	-185	-171	2.17	3.88
2년 (25.1.10.)	-173	-173	-128	-156	-127	-156	-136	2.36	3.72
3년 (25.1.10.)	-191	-191	-133	-151	-124	-144	-124	2.43	3.67
5년 (25.1.10.)	-189	-189	-135	-144	-121	-138	-119	2.60	3.79
10년 (25.1.14.)	-195	-195	-160	-161	-142	-158	-143	2.85	4.28

주: 1) 미국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 통안증권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만기별 한·미 금리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II-7. 우리나라 및 미국 장단기금리차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한국 및 미국 장단기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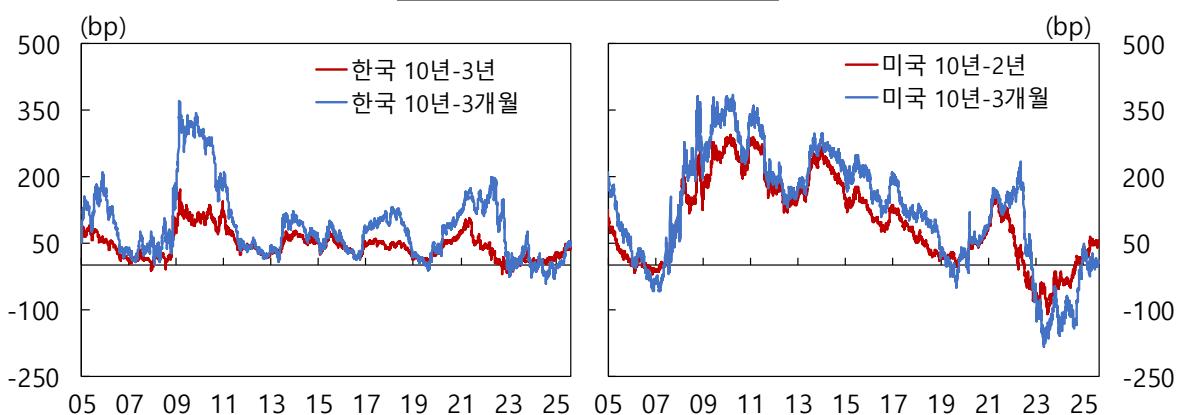
(bp)

		13~24년 평균	2023년				2024년				2025년			
			12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9일	7월말	8.25일		
한국	10년-3년	37	3	9	18	26	29	44	36	37	33	42		
	10년-2년 <sup>1)</sup>	41	-8	3	18	9	24	45	36	41	39	49		
	10년-3개월 <sup>1)</sup>	65	-28	-18	-16	-10	1	31	44	48	44	52		
	3년-3개월 <sup>1)</sup>	30	-31	-27	-34	-36	-28	-13	8	11	11	10		
	3년기준금리	31	-35	-32	-69	-40	-48	-15	-5	-2	-4	-7		
미국	10년-3년	63	-13	-15	23	30	56	54	54	52	47	61		
	10년-2년	74	-37	-35	14	33	56	50	51	49	41	56		
	10년-3개월	97	-145	-95	-84	26	-13	7	-6	-3	3	9		
	3년-3개월	33	-132	-80	-107	-4	-69	-47	-60	-55	-44	-52		
	3년기준금리	19	-149	-95	-145	-23	-90	-64	-81	-69	-60	-83		

주: 1) 3개월은 통안증권 기준, 2년은 국고2년 발행(21.3.11일) 이전은 통안증권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한·미 장단기금리차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II-8. 한·미 금리역전기 사례

통화정책국

- 한·미 정책금리 역전 기사는 금번 포함 총 4차례이며, 모두 양국의 정책금리 인상기에 발생(①기 99.6~01.3월, ②기 05.8~07.9월, ③기 18.3~20.3월, ④기 22.7~현재, 단, 22.8.25~9.20일 일시 해소)
- [과거 ①~③기] 역전 지속기간은 2년 내외, 역전폭은 평균 60~90bp, 최대 역전폭은 100~150bp(금번 ④기: 약 36.7개월간 평균 162.1bp 역전)
  - 장기금리(국고채 3년물)도 ①기<sup>\*</sup>를 제외하고 역전
    - \*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의 높은 리스크프리미엄으로 시장금리 역전 미발생
  - 원/달러 환율은 ②기<sup>\*</sup>를 제외하고 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
    - \* 미국 경기둔화 우려, 국내 조선사 수주 호조 등으로 환율이 하락
  - 정책금리 역전으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음
- [금번 ④기] 장기금리(국고채 3년물) 최대 역전폭은 191bp, 외국인 증권 자금은 대체로 순유입(기간중 22.7.27~25.7.31 기준) +636.2억달러),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상승 후 1,200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재차 상승하여 작년 10월 이후 1,350~1,480원대에서 등락을 지속(기간중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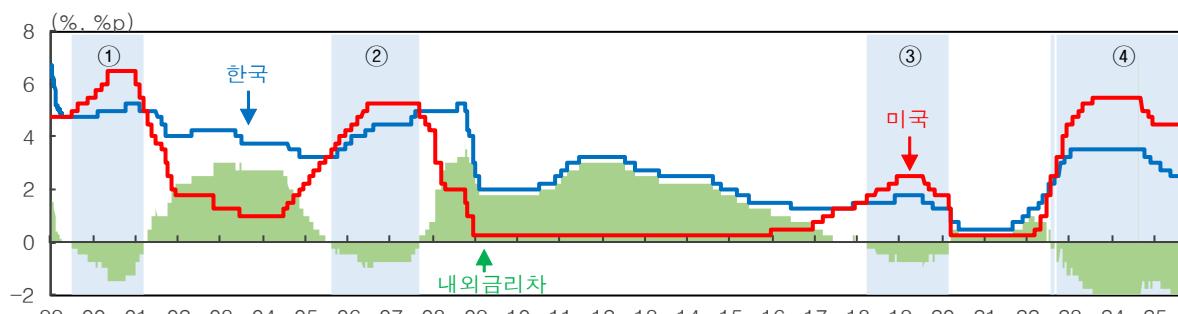
한·미 정책금리 역전기

	지속기간	정책금리 역전폭 [평균]	정책금리 역전폭 [최대]	장기금리(국고채 3년물) 역전 여부	원화 절상(+) ·절하(-)율 <sup>2)</sup>
①기(99.6~01.3)	21.0개월	92.2bp	150bp(142일 지속)	X	-10.9%(-10.9%)
②기(05.8~07.9)	25.7개월	64.6bp	100bp( 71일 지속)	O(최대 35bp)	+9.1%(-4.3%)
③기(18.3~20.3)	23.8개월	58.7bp	100bp( 13일 지속)	O(최대 108bp)	-10.2%(-12.3%)
④기(22.7~25.8 <sup>1)</sup> )	36.7개월	162.1bp	200bp(511일 지속)	O(최대 191bp)	-5.9%(-11.5%)

주: 1) 22.7.27~25.8.26 기준 (역전이 일시 해소된 22.8.25~9.20일 제외)

2) 기간중 절상(+)·절하(-)율, 단, ( )내는 기간중 최대 절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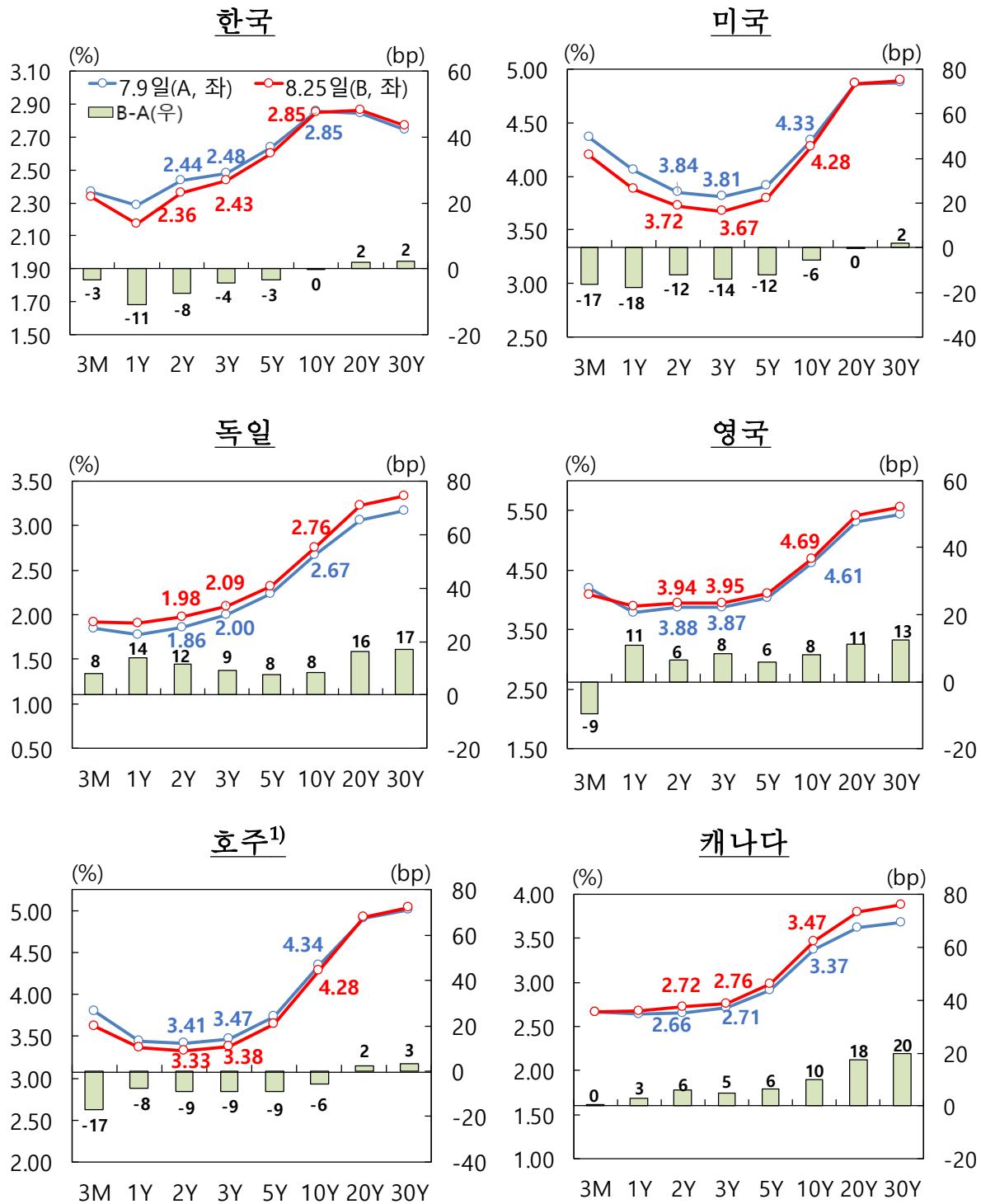
한·미 정책금리 추이<sup>1)</sup>



주: 1) 음영은 정책금리 역전기

## II-9. 주요국 수익률 곡선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주: 1) 호주 3M는 OIS(Overnight Indexed Swaps)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II-10. 주요국 회사채 및 CP 신용스프레드 비교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 자금시장팀

### 주요국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2)</sup>

(bp)

		신용스프레드 수준						기간중 변동폭						
		25년						23년	24년	연중	6월중	7월중	8.1~25	25.7.10~8.25일
AA급	한국 <sup>3)</sup>	74	68	50	49	48	48	-74	-6	-20	-3	-2	0	-1
	미국	48	45	47	46	43	41	-21	-3	-4	0	-4	-2	-5
	유로	92	64	58	52	49	51	-4	-28	-13	-5	-9	2	-1
	영국	75	48	55	52	51	48	-37	-27	0	-6	-4	-3	-4
	캐나다	98	73	67	64	60	62	-15	-25	-11	-1	-7	2	-2
	평균 <sup>4)</sup>	78	58	57	53	51	50	-19	-21	-7	-3	-6	0	-3
BBB급	한국 <sup>3)</sup>	212	168	161	160	160	160	-35	-44	-8	2	-1	0	0
	미국	121	97	105	99	94	93	-38	-24	-4	-4	-11	-1	-6
	유로	160	115	106	98	91	93	-41	-45	-22	-9	-15	2	-5
	영국	176	119	120	114	111	110	-61	-57	-9	-10	-9	-1	-4
	캐나다	157	117	116	113	103	108	-32	-40	-9	-5	-13	5	-5
	평균 <sup>4)</sup>	154	112	112	106	100	101	-43	-42	-11	-7	-12	1	-5

주: 1) 한국은 3년물 민평금리, 여타 국가는 Bloomberg 회사채 지수 기준

2) 데이터 누락시 이전 거래일(1~5영업일 이내) 스프레드를 적용

3) 한국 AA급은 AA-등급, BBB급은 A-등급 기준

4) 미국, 유로, 영국, 캐나다 4개국 평균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 주요국 CP(3개월) 스프레드<sup>1)2)</sup>

(bp)

		CP스프레드 수준						기간중 변동폭						
		23말	24말	25년				23년	24년	연중	6월중	7월중	8월중	25.7.10~8.25일
한국 <sup>3)</sup>	(A1)	81	45	33	33	35	37	-87	-36	-8	7	2	2	4
	(A2)	112	58	45	45	47	49	-85	-54	-9	7	2	2	4
미국 <sup>3)</sup>	(A1)	4	8	6	1	1	4	-16	4	-4	2	-5	3	3
	(A2)	30	31	24	25	27	23	-31	1	-8	6	3	-5	-2
유로(all rating) <sup>4)</sup>	12	41	7	7	7	-1	-7	29	-41	-5	0	-8	-8	
영국 (A1)	-11	-10	-4	1	3	3	-36	2	13	-4	7	0	2	

주: 1) 한국은 통안증권(91일) 대비, 미국·영국은 T-bill 3M 대비, 유로는 Euribor 3M 대비

2) 데이터 누락시 이전 거래일(1~5영업일 이내) 스프레드를 적용

3) 한국은 민평금리 기준, 미국은 실제 거래금리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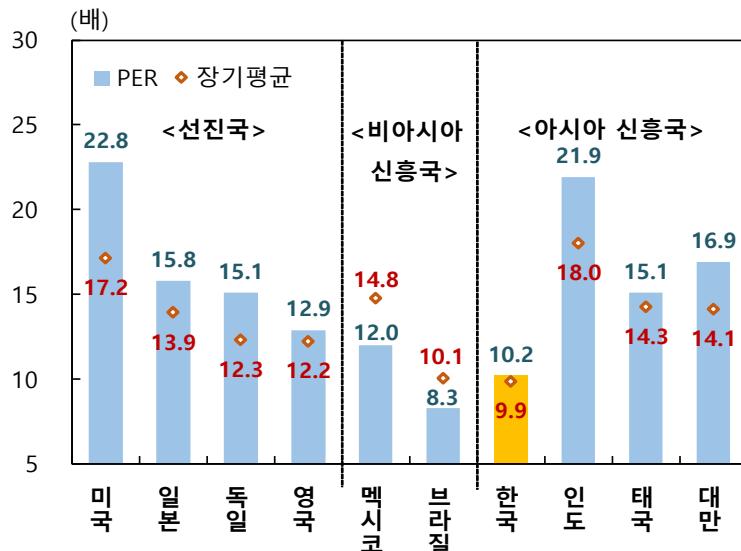
4) 유로는 non-financial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ECB

## II-11. 주식시장 PER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주요국 주식시장 PER<sup>1)</sup>



주: 1) 2025.8.25일 기준, 장기평균은 2010.1월~최근

자료: Refinitiv

코스피 PER 및 PBR



자료: Bloomberg, Refinitiv

## II-12. 중동 무력 분쟁 이후 국제금융시장 지표

국제국

	23.10.6일 <sup>1)</sup>	24년 말	25.8.25일	23.10.6일 대비	YTD
WTI(U\$/bbl)	82.8	71.7	64.8	-21.7	-9.6
미 S&P 500	4,308.5	5,881.6	6439.3	49.5	9.5
유럽 Stoxx 600	444.9	507.6	558.8	25.6	10.1
미 국채금리(10년)	4.80	4.57	4.28	-53	-29
미 달러화(DXY 지수)	106.0	108.5	98.4	-7.2	-9.3
엔달러 환율 <sup>2)</sup>	149.3	157.3	147.75	1.0	6.5
원/달러 환율 <sup>2)</sup>	1,349.9	1,472.5	1384.7	-2.5	6.3
이스라엘 지표					
(주가)	1,830.7	2,395.0	3048.1	66.5	27.3
(환율) <sup>2)</sup>	3.846	3.637	3.379	13.8	7.6
(국채 스프레드) <sup>3)</sup>	188	169	348.7173	161	180
(CDS 프리미엄)	59	101	74.74	16	-26
이스라엘 주변국 주가					
(이집트)	19,873.3	29,740.6	35810.6	80.2	20.4
(레바논)	1,795.1	2,627.6	1944.7	8.3	-26.0
(사우디)	10,764.9	12,036.5	10898.0	1.2	-9.5
(요르단)	2,471.5	2,488.8	2959.9	19.8	18.9
(이란) <sup>4)</sup>	2,069,800	2,788,214	2,475,000	19.6	-11.2

주: 1)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23.10.7일) 직전 거래일

2) 미 달러화 대비, 변동률은 절상(+)·절하(-)율(%)

3) 미 국채 대비

4) 25.8.20일 기준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Tehran Times

## II-13.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sup>1)</sup>

국제국

	24년 이후	24년 중	25년 중	8월 중 <sup>1)</sup>		
				6월 중	7월 중	8월 중 <sup>1)</sup>
미 달러화(DXY 지수)	-2.9	7.1	-9.3	-2.5	3.2	-1.5
멕시코	-9.1	-18.5	11.5	3.7	-0.7	1.1
헝가리	1.4	-13.1	16.7	4.7	-2.9	2.7
영국	5.7	-1.7	7.5	2.0	-3.8	1.9
홍콩	0.0	0.6	-0.6	-0.1	0.0	0.5
체코	5.9	-8.3	15.5	4.4	-2.3	2.1
인도	-5.0	-2.8	-2.2	-0.2	-2.1	0.1
인도네시아	-4.7	-4.0	-0.7	0.6	-1.5	1.4
브라질	-10.3	-21.4	14.0	5.3	-3.0	3.5
아르헨티나	-40.4	-21.6	-24.0	-1.2	-12.2	1.0
중국	-0.6	-2.6	2.0	0.4	-0.4	0.6
유로지역	5.3	-6.1	12.2	3.9	-3.2	1.8
싱가포르	2.8	-3.1	6.1	1.3	-1.8	1.1
스위스	4.4	-7.6	12.9	3.5	-2.2	1.0
튀르키예	-27.9	-16.5	-13.7	-1.6	-1.9	-1.0
대만	0.4	-6.7	7.7	2.2	-2.2	-1.9
말레이시아	9.1	2.6	6.3	1.1	-1.4	1.5
호주	-4.6	-8.6	4.4	1.7	-1.4	0.8
러시아	10.9	-21.3	40.9	-1.7	-2.1	-0.9
남아공	3.7	-3.4	7.3	1.6	-2.6	3.3
태국	5.8	0.1	5.7	1.1	-0.6	0.8
스웨덴	5.0	-9.3	15.8	1.2	-3.1	2.3
한국	-7.0	-12.5	6.3	2.2	-2.7	0.2
일본	-4.5	-10.3	6.5	0.0	-4.5	2.1

주: 1) 8.25일 기준. 미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 II-14. CDS프리미엄 및 KP스프레드 추이

국제국

<표1> 우리나라 등의 CDS프리미엄

(기간중 평균<sup>1)</sup>, b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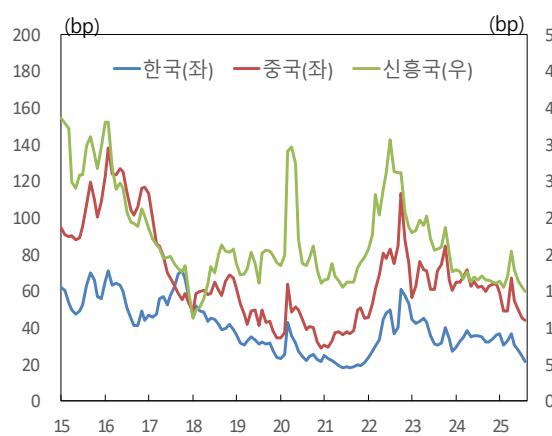
	15~21 년중	22년	23년	24년	25년	6월	7월(A)	8월(B) <sup>2)</sup>	전월비 증감(B-A) (증감률, %)
									(증감률, %)
신흥국	226	279	221	168	168	164	154	150	-5bp (-3.2)
우리나라	42	42	37	34	30	27	24	21	-3bp (-13.0)
중국	68	75	68	64	52	49	45	44	-1bp (-3.0)

주: 1) 일별 자료의 기간중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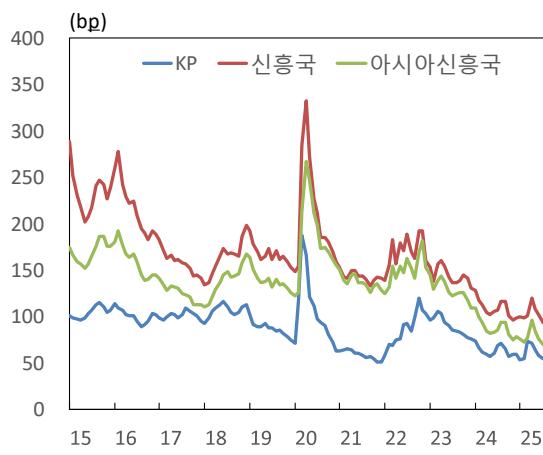
2) 8.1~8.25일중

자료: BIDAS(ICE CMA), Barclays

<그림1> CDS프리미엄<sup>1)</sup>



<그림2> KP스프레드<sup>1)</sup> 등



주: 1) 일별 자료의 월평균

자료: BIDAS(ICE CMA), Barclays

주: 1) 일별 자료의 월평균

자료: Barclays

<표2> 우리나라 등의 외화채권 스프레드

(기간중 평균<sup>1)</sup>, bp, %)

	15~21 년중	22년	23년	24년	25년	6월	7월(A)	8월(B) <sup>2)</sup>	전월비 증감(B-A) (증감률, %)
									(증감률, %)
신흥국	185	171	145	109	102	102	94	90	-4bp (-3.9)
아시아 신흥국	151	151	129	88	78	77	70	67	-4bp (-5.3)
우리나라	96	83	92	65	62	64	59	55	-4bp (-7.0)
중국	240	336	236	124	107	118	88	82	-6bp (-7.0)

주: 1) 일별 자료의 기간중 평균

2) 8.1~8.25일중

자료: Barclays

## II-15. 기준금리 수준별 경제주체의 연간 이자부담규모

금융안정국

- 현재 기준금리 수준(2.50%)에서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전체 대출에 대한 이자 규모는 연간 175.9조원 수준
- 기준금리가 25bp 인하(인상)될 경우 연간 이자상환부담은 6.1조원 감소(증가)
  - 차주별\* 이자부담 변동 규모를 보면, 가계 3.1조원, 기업 3.0조원 정도

\* 한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7조원 규모 변동

### 기준금리 수준별 경제주체의 연간 이자부담규모<sup>1)</sup>

(조원)

	이자부담 규모 (기준금리 2.50% 수준 전제)	기준금리 25bp 변동시 이자부담 증감 규모 (+25bp시 증가, -25bp시 감소)
가계 ①  (자영업자 가계, a)	88.7  (15.9)	3.1  (0.5)
기업 ②  (자영업자 기업, b)	87.2  (32.8)	3.0  (1.1)
자영업자(a+b) <sup>2)</sup>	48.7	1.7
<b>합계(①+②)</b>	<b>175.9</b>	<b>6.1</b>

주: 1) 25.1/4분기말 기준(총 3,730조원 중 가계대출 잔액 1,810조원, 기업대출 1,920조원)으로 시산, 각 부문별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 등을 이용

2)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

## II-16. 부동산가격 동향

금융안정국

- 주택매매 실거래가지수는 2025년 6월 1.43% 상승(전월대비, 2021년 9월(1.82%) 이후 45개월만에 최고치)
- 전세 실거래가 지수는 2025년 5월 기준 최고점(21.11월, B) 대비 4.5% 하락

**코로나19 이후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현황<sup>1)</sup>**

(%)

고점 또는 저점		최고점 <sup>2)</sup> (B)	최저점 <sup>2)</sup> (C)	현재(D)	최근 상승, 하락 지속기간
주택가격 변동률		19.12월(A) 대비 (B/A)	고점(B) 대비 (C/B)	저점(C) 대비 (D/C)	
매 매	실거래가지수 <sup>3)</sup>	<b>35.6</b> [21.10월]	<b>-16.0</b> [23.1월]	<b>6.6</b> [25.6월, 현재]	상승, 2개월
	아파트	<b>41.2</b> [21.10월]	<b>-18.9</b> [23.1월]	<b>7.4</b> [25.6월, 현재]	상승, 2개월
	매매가격지수	<b>16.1</b> [22.5월]	<b>-8.8</b> [23.6월]	<b>0.8</b> [25.7월, 현재]	상승, 2개월
전 세	실거래가지수 <sup>4)</sup>	<b>23.2</b> [21.11월]	<b>-13.1</b> [23.2월]	<b>9.8</b> [25.5월, 현재]	상승, 1개월
	전세가격지수	<b>11.5</b> [22.1월]	<b>-11.5</b> [23.7월]	<b>2.6</b> [25.7월, 현재]	상승, 5개월

주: 1) 실거래가지수는 매매 25.6월말·전세 25.5월말, 가격지수는 25.7월말 기준

2) 19.12월 이후 기준

3)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기준

4)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가격전망 CSI는 2025년 2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6.27대책 이후 7월 하락 전환하였으나, 8월중 다시 소폭 상승

**주택가격전망 CSI<sup>1)</sup>**

코로나19 이전 (19.12월)	코로나19 이후		25.1~8월							
	고점(20.12월)	저점(22.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5	132	61	101	99	105	108	111	120	109	111

주 : 1) 100보다 큰(작은) 경우 주택가격을 긍정적(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가구가 많음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ECOS)

## II-17. 은행 예대금리차

금융안정국

-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2025년 6월 말 기준 2.20%p로 전월 말 (2.19%)과 유사한 수준
-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1.54%p로 2024년 9월 상승 전환 후 2025년 들어서도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냄

예금은행 예대금리차 추이

(%p)

	22년	23년	24년				25년			장기평균 (10.1~25.6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5월	6월	
잔액 기준 <sup>1)</sup>	2.55	2.53	2.50	2.36	2.24	2.29	2.25	2.19	<b>2.20</b>	2.52
신규취급액 기준 <sup>2)</sup>	1.35	1.29	1.27	1.20	1.22	1.43	1.52	1.54	<b>1.54</b>	1.79
(대출금리)	5.57	5.14	4.85	4.71	4.62	4.64	4.36	4.17	<b>4.09</b>	4.69
(수신금리)	4.22	3.85	3.58	3.51	3.40	3.21	2.84	2.63	<b>2.55</b>	2.90

주: 1) 기간말 기준, 총대출 금리 - 총수신(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포함) 금리

2) 대출(당좌대출 및 마이너스대출 제외) 금리 - 저축성수신 금리

## II-18.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주택가격 변동

금융안정국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공동주택 실거래가 기준)은 21.10월 기준 35.6% (19.12월 대비) 상승하여 최고점을 기록한 후 23.1월까지 16.0% 하락하였으며, 이후 재상승하여 25.6월에는 최고점 대비 10.4% 하락<sup>\*</sup>한 수준을 보임

\* 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 기준:

19.12월 이후 최고점(22.5월) 대비 전국 8.1%, 서울 0.7% 하락<sup>#</sup>(25.7월 기준)

#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 공동주택 이외에 단독주택 등을 포함하고 2) 표본을 통해 전체 주택가격의 변동을 추정하고 있어 실제 거래신고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실거래가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낮음

- 다만, 서울의 경우 최고점 수준에 근접한 상황(최고점 대비 -0.1%)

- 대부분의 주요국 주택가격<sup>\*</sup>은 최고점(19.12월 이후 기준) 대비 0.1 ~ 14.5% 가량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금년 중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

\* 입수가능한 최근 가격(25.5~7월) 기준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

(%)

시점	최고점(B) <sup>1)</sup>	현재(C)
주택가격 변동률	19.12월(A) 대비 (B/A)	최고점(B) 대비 (C/B)
한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기준)	<b>35.6</b> [21.10월]	<b>-10.4</b> [25.6월]
<서울>	<b>37.5</b> [21.10월]	<b>-0.1</b> [25.6월]
미국	<b>57.6</b> [25.6월]	<b>-2.4</b> [25.7월]
<20개 주요 도시>	<b>54.1</b> [25.2월]	<b>-0.9</b> [25.5월]
캐나다	<b>37.7</b> [22.4월]	<b>-5.6</b> [25.7월]
일본	<b>42.8</b> [25.5월]	-
중국	<b>20.9</b> [21.2월]	<b>-10.2</b> [25.7월]
독일	<b>32.3</b> [22.6월]	<b>-2.6</b> [25.7월]
영국	<b>26.1</b> [25.3월]	<b>-0.1</b> [25.6월]
뉴질랜드	<b>46.9</b> [22.1월]	<b>-14.5</b> [25.7월]
호주	<b>57.5</b> [25.7월]	-

주: 1) 19.12월 이후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FRED, 각국 중앙은행, OECD, CEIC 등